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 도출 연구

김태완

최준영·정희선·정홍원·김성아·김기태·오미애·전진아·최선영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태완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준영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희선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홍원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진아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선영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수시) 2024-01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 도출 연구

발 행 일 2024년 0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17-5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01>

발|간|사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회정책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양극화, 격차의 지속, 기술혁신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여러 사회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정책연구 역시 변화해야 한다. 사회변화를 잘 인식하고, 파악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회정책,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변화 속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연구과제는 미래 우리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지향해야 할 연구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자체 조사, 최근 수행한 연구과제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안된 정책과제가 미래 사회정책의 방향 설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정홍원, 김기태, 오미애, 전진아 연구위원, 김성아, 최선영 부연구위원, 최준영 전문연구원, 정희선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견을 주신 우리 원의 노대명 박사와 원외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에게 감사를 전한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향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사회현상과 변화를 다루고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사회정책 등에 관심이 있는 교수,

전문가 및 관련 분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는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24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 한계	19
 제2장 사회정책 환경 변화	21
제1절 대내외적 환경 및 사회정책 변화	23
제2절 빅데이터 분석	56
 제3장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75
제1절 (외부)전문가 패널 조사	77
제2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전문가 조사	94
 제4장 사회정책 분야별 대응 연구과제	105
제1절 보건 및 사회정책 연구 동향 분석	107
제2절 사회정책 중장기 설정 방향에 대한 검토	125
 제5장 결론 및 제언	131
제1절 중장기 사회정책 변화 방향	133
제2절 중기 정책 연구과제 방향	136



참고문헌	149
------------	-----

부록	155
----------	-----

[부록 1] (외부)전문가 패널 조사표	155
-----------------------------	-----

[부록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전문가 조사표	161
-----------------------------------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1〉 주요국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2019년 확정치)	14
〈표 2-1-1〉 연도별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27
〈표 2-1-2〉 국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29
〈표 2-1-3〉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과제	34
〈표 2-1-4〉 미래의 사회 11개 이슈(1)	45
〈표 2-1-5〉 미래의 사회 11개 이슈(2)	46
〈표 3-1-1〉 전문가 조사(1차) 응답 현황	78
〈표 3-1-2〉 전문가 조사(2차) 응답 현황	79
〈표 3-1-3〉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목록	82
〈표 3-2-1〉 연구자 대상 설문 응답 현황(중복응답)	94
〈표 3-2-2〉 중기적으로 연구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변화	100
〈표 3-2-3〉 중기적으로 실단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	103
〈표 4-1-1〉 분야 및 용역기관별 과제 현황	107
〈표 4-1-2〉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의 연구 주제별 키워드	108
〈표 4-1-3〉 최근 3년간 수행된 연구 주제 및 과제 구분별 키워드	109
〈표 4-1-4〉 최근 3년간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용역기관별 키워드	109
〈표 4-1-5〉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의 키워드(20개 이상)	110
〈표 4-1-6〉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 구분별 키워드(20개 이상)	111
〈표 4-1-7〉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의 키워드(10개 이상~20개 미만)	112
〈표 4-1-8〉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 구분별 키워드(10개 이상~20개 미만)	113
〈표 4-1-9〉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의 키워드(5개 이상~10개 미만)	114
〈표 4-1-10〉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 구분별 키워드(5개 이상~10개 미만)	115
〈표 4-1-11〉 사회정책 환경 변화 키워드별 연구 동향	118
〈표 4-1-12〉 현재 및 미래 이슈 키워드별 최근 3년간 연구 동향	123
〈표 5-2-1〉 분야별 전략과제 중, 최근 3년 간 주요 수행 과제 리스트	145

그림 목차

[그림 1-1-1] 전체 연구분석틀	18
[그림 2-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2년	24
[그림 2-1-2] 장래인구추계(2022~2070년): 인구연령구조와 총인구	25
[그림 2-1-3] 1인 가구 특징	26
[그림 2-1-4] 소득분배 변화	28
[그림 2-1-5] 한국은행 경제 전망	30
[그림 2-1-6]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31
[그림 2-1-7] 지구 연평균 온도 변화 추이	36
[그림 2-1-8] 성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	40
[그림 2-1-9] 건강격차 지표 현황	41
[그림 2-1-10]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추진체계도	43
[그림 2-1-11]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비전 및 추진방향	48
[그림 2-1-12] 제1차 사회서비스기본계획(2024~2028) 비전 및 추진방향	50
[그림 2-1-13]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비전 및 추진방향	53
[그림 2-1-14]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 비전 및 추진방향	55
[그림 2-2-1] 불평등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57
[그림 2-2-2] 양극화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58
[그림 2-2-3] 불평등 & 양극화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59
[그림 2-2-4] 기후 위기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60
[그림 2-2-5] 미래사회 대응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60
[그림 2-2-6] 디지털 전환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61
[그림 2-2-7]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62
[그림 2-2-8]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63
[그림 2-2-9] 인구감소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64
[그림 2-2-10] 사회적 재난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65
[그림 2-2-11] 사회보장 분야 소셜데이터(2021년)	67
[그림 2-2-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체 기간 주요 키워드	68



[그림 2-2-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5년 주요 키워드	68
[그림 2-2-14] 기후 위기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	69
[그림 2-2-15] 인구감소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	71
[그림 2-2-16] 디지털 전환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	72
[그림 2-2-17] 인구감소&적응과 기후 변화&적응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73
[그림 2-2-18] 디지털 전환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74
[그림 3-1-1] 향후 5년간 사회정책의 정책환경 변화 동인과 추세	80
[그림 3-1-2] 보건 의료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85
[그림 3-1-3] 보건 의료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	86
[그림 3-1-4] 소득보장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87
[그림 3-1-5] 소득보장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	88
[그림 3-1-6]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89
[그림 3-1-7]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	90
[그림 3-1-8] 인구가족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91
[그림 3-1-9] 인구가족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	92
[그림 3-1-10] 기타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93
[그림 3-1-11] 기타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	93
[그림 3-2-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근무 경력	95
[그림 3-2-2] 연구과제의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력	95
[그림 3-2-3]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향후 지향점(중복 응답)	96
[그림 3-2-4] 향후 출연연구기관이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연구 분야에 대한 인식 ...	97
[그림 3-2-5]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원의 대응 정도	98
[그림 5-2-1] 주요 키워드: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137
[그림 5-2-2] 향후 전략과제	138
[그림 5-2-3] 분야별 전략과제	141



Abstract

Setting Medium-Term Research Tasks to Respond to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Project Head: Kim, Tae-wan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we analyz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that Korean society and social policies face or will face. Second, we propose directions and tasks that should be promoted for future social policy.

In Korea, low birth rate trends persist,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The effect of redistributive policies on income distribution remains limited, and social views are becoming increasingly negative about the continuing trends in labor market inequality, asset polarization, and weakening social mobility. The pace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big data accumulation and processing technology is accelerating, and climate change is being felt around the world as disaster situations such as extreme heat waves, extreme cold, floods, and droughts have occurred repeatedly around the world over the past few years.

As part of this study, an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to predict future policy direction and environment. The drivers of changes in the social policy environment over the next five

Co-Researchers: Choi, Junyoung·Jung, Heesun·Chung, Hongwon·Kim, Seonga·Kim, Ki-tae·Oh, Miae·Jun, Jina·Choi, Sun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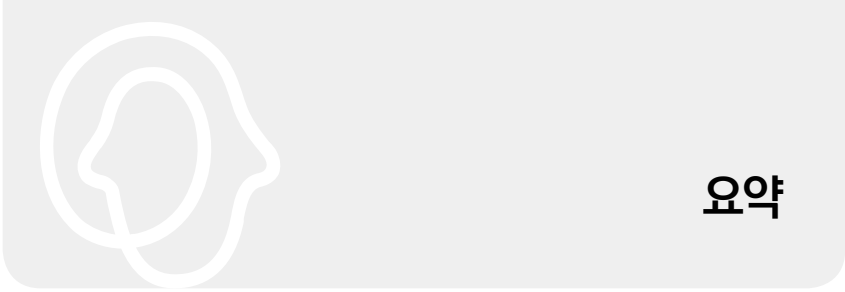
years can be summarized into four categories: population ag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low growth, and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rends in policy environment changes are characterized by deepening disparities and inequalities, increasing social conflict, employment instability and labor market polarization, regional gaps, and the emergence of new crises due to deepening social problems.

Our keyword analysis of research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ver the past three years found that ‘social security’, ‘overseas’, ‘family’, ‘aging’, ‘survey’, ‘youth’, ‘performance evaluation’, ‘low birth rate’, ‘health care’, ‘COVID-19’, ‘social service’, and ‘mandatory plan’ appeared as keywords in more than 20 research studies. Keywords that appeared in 5 to 10 studies include ‘health insurance’, ‘digital transformation’, ‘social security finance’,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 ‘response to future society’, ‘social integration’, and ‘flexibility’. Keywords that appeared in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over the past three years were ‘health insurance’, ‘management and operation’, ‘child protection’, ‘community care’, ‘seniors’, ‘medical coverage’, and ‘evaluation system’.

The main keywords identified for research direction and task setting were ‘sustainability’ and ‘diversity’. In order to diagnose and set the direction of social policy and the Korean welfare

stat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engage in collaborative research tasks that can respond to dynamic changes.

Key words : Policy environment, policy tasks, future response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번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진단하고, 다가올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필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한국 사회와 사회정책이 직면하거나 직면하게 될 정책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둘째,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사회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 및 제안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사회정책 환경 변화

우리나라는 저출산 추세가 장기화되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가족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소득분배 및 시장소득 측면에서 분배 개선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노동시장 불평등, 자산 양극화 현상, 사회이동성 약화 등 부정적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 축적 및 처리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지난 수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한, 홍수, 가뭄 등 재난 상황이 반복되어 기후 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강수명 격차는 성별,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평등, 양극화, 기후 위기,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적 재난 등이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분석되었다. 미래 변화 키워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로 기후 위기, 인구감소, 디지털 전환을 꼽을 수 있다. 이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를 연결하여 미래 변화 키워드에 따른 감성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후 위기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 및 친환경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구감소는 더 이상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며,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나.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미래 정책 방향과 정책환경을 예측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를 견인하는 동인은 인구 고령화, 기술 발전, 저성장, 그리고 환경·기후 변화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정책환경 변화의 주요 추세로는 격차와 불평등 심화, 사회갈등 증가, 고용 불안정과 노동시장 양극화, 지역 간 격차, 그리고 사회문제 심화에 따른 새로운 위기 발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분야별로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인력, 지역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건강보장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디지털 기술 활용 보건의료 정책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보장 분야는 연금제도 개혁, 인구구조, 기술방안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보장체계의 구조화, 소득 불

평등, 소비 불평등, 자산 불평등과 빈곤 불평등, 격차의 세대 간 전승/전이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재구조화: 컨트롤타워, 중앙-지방 기능 조정,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가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족 분야는 인구감소 시대와 사회보장 재정, 미래 가구구성 변화(1인 가구, 다양한 형태의 가구 등) 예측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정 등 기타 분야에서는 사회갈등(시대, 계층, 젠더 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대규모 재난 대응과 사회보장정책이 높게 나타났다.

다. 사회정책 분야별 대응 연구과제

보건정책 및 사회정책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보건 및 사회정책 연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보장, 해외, 가족, 고령화, 실태조사, 청년, 성과평가, 저출산, 보건의료, 코로나19, 사회서비스, 법정계획의 빈도수가 20개 이상으로, 많이 나타난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빈도수가 10개 이상에서 20개 미만인 키워드는 인구구조 변화, 통계, 보건복지서비스, 생애주기, 양극화, 장애인, 지역사회, 인구, 지속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불평등, 소득보장, 정신건강, 행정데이터 연계, 복지국가였다. 한편,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중에서 키워드의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분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빈도수가 5개 이상에서 10개 미만인 키워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디지털 전환, 사회보장 재정, 환경변화 대응, 미래사회 대응, 사회통합, 유연성 등이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키워드는 건강보험, 관리운영, 아동보호, 지역사회 돌봄, 노인, 의료보장, 평가체계이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연구 동향에서 현재 및 미래 이슈 관련 키워드를 살펴보면, 현재 이슈로 도출된 키워드는 돌봄, 인구감소 및 인구이동, 불평등, 정신건강이었으며, 미래 이슈 관련 키워드는 기후 변화 및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사회적 재난,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유연성 등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제시한 주요 이슈 및 키워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슈에 대한 환경 분석 및 원인 진단에 관한 연구는 면밀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미래 이슈로 도출된 키워드는 중기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연구이자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변화에 대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이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연구 방향 및 과제 설정을 위해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된 주요 키워드를 제안하면,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다이내믹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사회정책의 대상이었던 노인, 장애인 등을 넘어서 새로운 취약계층, 위기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하다.

사회정책 및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을 진단하고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차원에서 다이내믹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업과제가 필요하다. 개별 영역과 분야별 연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지

국가, 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서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역별로 서로 다른 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한 협업과제가 제안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방향,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등에 대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소득보장 분야는 자격 중심,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체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형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거나 새롭게 현금성 급여 등이 등장함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거버넌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저출산 분야는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 및 대응 연구와 더불어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가 필연적이라면 그 변화에 적응하여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회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과제도 필요하다. 재정 및 DB 분야는 현재의 재원 구조(조세, 사회보험료 등)로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인지, 빅데이터, 행정 DB 등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개인정보로 인한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과제가 필요하다.

주요 용어 : 정책환경, 정책과제, 미래 대응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 한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전통적 사회문제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고, 새로운 사회적 위기와 새로운 취약계층 등이 등장하면서 한국 복지국가는 내외부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인 소득보장, 서비스보장 등에서 사각지대의 발생은 여전하며, 사각지대로 인해 기존 계층은 물론 새로운 취약계층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하고 있다.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여겨져온 양극화·격차 확대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 격차의 확대는 사회이동성을 저하시키고, 계급 및 계층을 고착화시킴으로써 희망 없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회보장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은 미비한 상황이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표방하였지만 여전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주요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영세소상공인, 청년, 은둔·고립층, 과다채무자 등 새로운 형태의 위기계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통적, 신사회적 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¹⁾와 더불어 신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²⁾ 이들 제도 간 정합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충

분한 검증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약자 복지의 국정 기조 속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자산형성 사업, 사회서비스로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여 복지 수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정책 확충으로 정부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점유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이 진행되었지만, 재정 부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게 결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표 1-1-1〉 주요국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2019년 확정치)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독일	OECD 평균
GDP 대비 %	12.3	18.3	19.5	25.1	30.7	22.8	25.6	20.1
연평균 증가율 (‘09~19)	9.6	3.8	1.9	3.4	2.3	2.1	3.1	4.1

자료: 보건복지부, (2023a). 주요업무 참고자료.

사회정책 외부적으로는 미래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 등이 점차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복지국가, 사회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의 완화, 근로장려금 대상 및 급여조건 확대, 장애인등록제 폐지, 노인 및 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보장 영역의 범주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 2)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 도입, 장기요양보험 도입,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서울시 안심소득, 돌봄 SOS, 경기도는 기회소득 등 여러 형태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고 있다.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나 논의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현재와 미래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각종 사회적 위협에 대해 진단하고, 다가올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필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보장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루는 이슈 또한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2. 연구 목적

이번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한국 사회와 사회정책이 직면하거나 직면하게 될 정책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둘째,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사회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 및 제안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3년간 약 6백여 편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두 대내외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추구에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발굴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향후 사회정책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한 과제를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변화를 살펴보았다.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등 변화, 가계소득, 소득분배, 빈곤 등 변화와 추이,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와 전망, 기타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정책의 주요 전개 양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주요 사회정책 분야인 인구 및 가족,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최근 동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보건 및 사회정책 관련 연구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및 미래 연구과제에 대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내외부 환경 분석, 기존 연구과제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중기 관점에서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환경변화, 신규 사회적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은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문헌 분석과 더불어 양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환경변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양적 분석으로는 첫째, 사회현상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은 언론, SNS 등에서 표출된 사회적 위험, 미래 위기 등에 대한 트렌드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사회 분야별 전문가 약 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와 정책 대응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설문으로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과제를 분석하였으며, 2차 조사 설문은 1차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연구 주제에 대한 중요성, 시급성을 판단하고 연구원이 담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1차 개방형 설문 응답을 토대로 2차 조사에 반영될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었다.

이외에 보건 및 복지 정책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델파이 조사에서와 같이 향후 사회정책 분야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셋째,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 3년 내(2021~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약 6백여 편의 자체 과제와 용역과제를 대상으로 연구 주제와 키워드 등을 살펴보고, 대내외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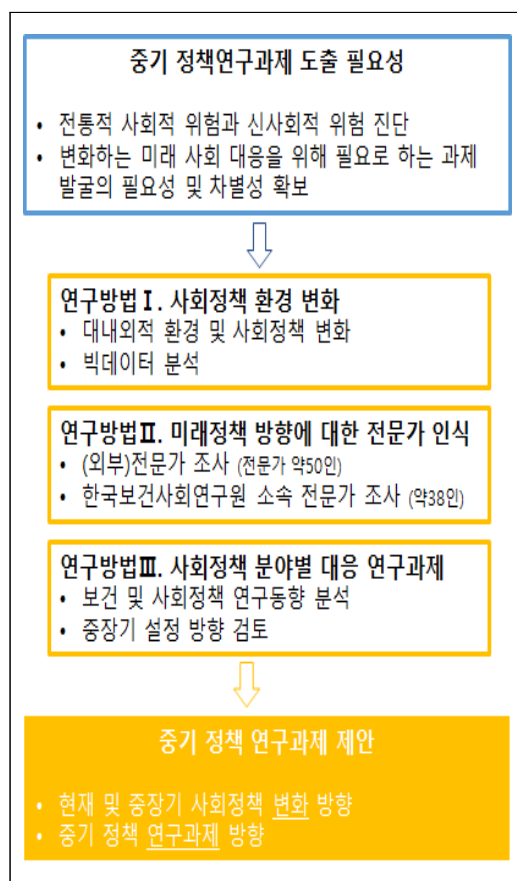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문헌 분석, 양적 분석, 자문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주요 키워드, 연구

주제 및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정책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한 분석은 아래와 같은 체계 속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그림 1-1-1] 전체 연구 분석틀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1. 기대효과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연구과제가 향후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기존 연구과제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목표나 개별 연구자의 주요 관심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면, 이번 연구는 현재적 인식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향후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올해 한 해로 그치지 않고 많은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는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는 2023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대내외의 많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의 연구 방법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델파이 조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지만, 예산, 연구 기간 등의 한계로 좀 더 많은 의견을 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결론에서 제안한 주요 과제 등이 새롭기보다는 이미 익숙한 연구 주제라는

점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외부의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했지만, 연구진행 과정에서 OECD, WHO 등 주요 국제기구와 주요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 주제와 동향 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나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연구들에 대한 정보 수집, 파악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차기에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국제기구나 해외 연구기관, 이외에 국내의 주요 연구기관이나 학자 등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나 주제 등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현재 직면한 대내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키워드와 과제가 발굴되다 보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 방향, 지향점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과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두 사회보험의 현재 정책적 현황과 위치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과제를 제안하고 동 과제의 현재 위치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정책과제 도출과 더불어 현재 정책 상황 속에서 동 과제의 의미와 필요성이 함께 제안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은 이번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지적된 한계를 고려하고, 이를 극복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사회정책 환경 변화

제1절 대내외적 환경 및 사회정책 변화

제2절 빅데이터 분석

제2장 사회정책 환경 변화

제1절 대내외적 환경 및 사회정책 변화

1. 대내외 환경 변화

가. 인구·가족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으로 감소하여 4분의 1 수준이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그림 2-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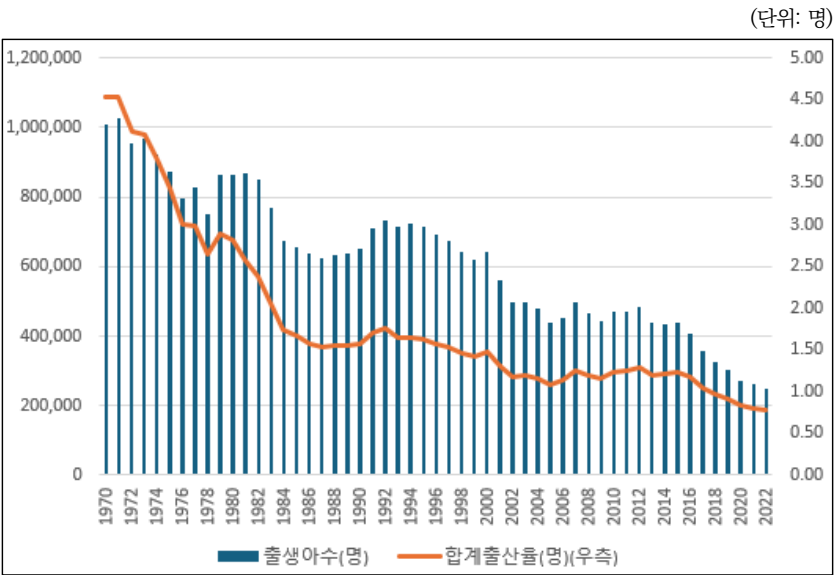
저출산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자연 감소를 경험하였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23.12.14)는 우리나라 총인구(추계인구)가 2022년 5,167만 명에서 2070년에는 3,7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림 2-1-2] 참조).

고령인구의 비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현재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각각 11.5%와 17.4%이지만, 2030년에는 각각 8.1%와 25.3%가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1%, 2070년에는 47.5%가 될 전망이다([그림 2-1-2] 참조).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인 기대수명·평균수명·중위연령의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인구 비율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 파급효과도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

다. 특히 인구변동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균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층, 성, 연령(세대), 지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인구변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변동의 파급력이 대상 인구집단, 지역, 세대, 지속성(視界)별로 개별화, 다양화, 이질화되는 경향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인구변동의 파급 영역도 종래의 교육, 돌봄, 의료, 국방 등의 영역을 넘어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인구정책의 범위도 함께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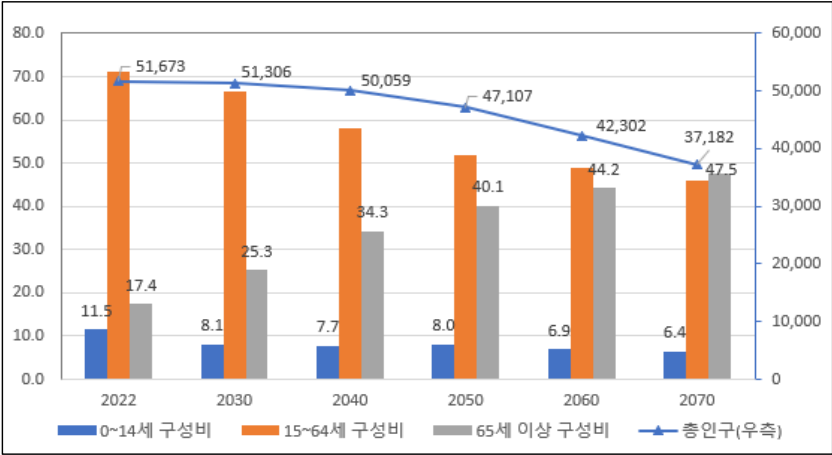
[그림 2-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2년



자료: 통계청(2022a), 인구동향조사,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2024.01.15

[그림 2-1-2] 장래인구추계(2022~2070년): 인구 연령구조와 총인구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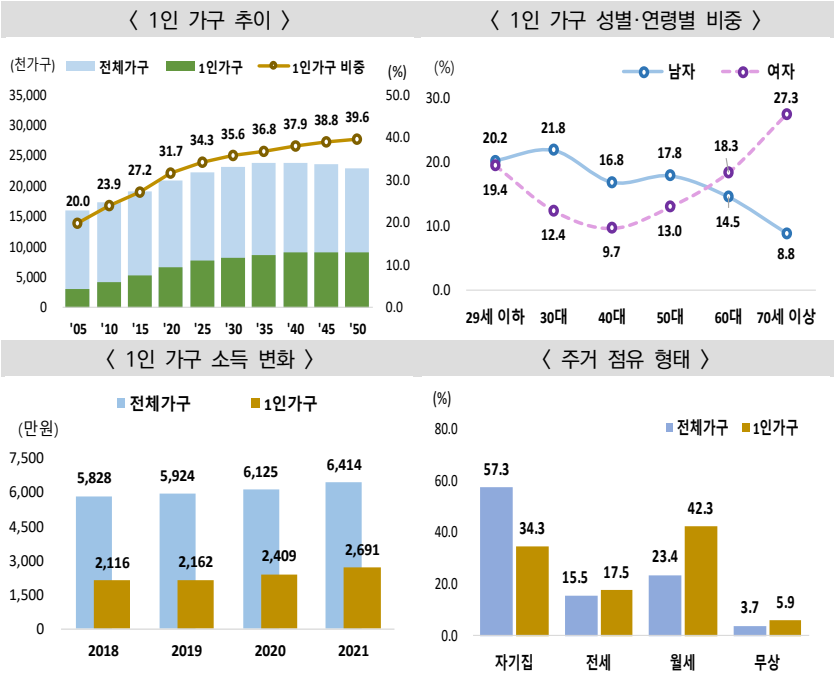
주: 중위 추계(기본 추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순이동-중위) 적용
자료: 통계청. (2023.12.14.).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보도자료.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족구조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가구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점유 비율은 20%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31.7%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약 4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변화는 1인 가구 내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소득수준이 다른 가구원에 비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소득이 낮고 고령층이 많다는 점은 쉽게 빈곤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개인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거 부문에서도 전체 가구에 비해 자가의 비중이 34.3%에 불과해 높지 않았으며,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는 월세 비중이 42.3%에 이르고 있어 주거비 부담 역시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림 2-1-3] 1인 가구의 특징



자료: 통계청. (2022b).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도자료

또한 저출산 상황이 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하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보건의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강희정, 2024).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22년에 약 43만 원으로 전체 평균인 16.6만 원의 약 2.6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며, 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나타났다(KBS 뉴스, 2023.10.4).

〈표 2-1-1〉 연도별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단위: 천 명, 억 원,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적용 인구	전체	50,941	51,072	51,391	51,345	51,412	51,410	△2	△0.004
	65세 이상	6,806	7,092	7,463	7,904	8,320	8,751	431	5.2
	비율(%)	(13.4)	(13.9)	(14.5)	(15.4)	(16.2)	(17.0)		
진료비	전체	693,352	776,583	864,775	869,545	935,011	1,024,277	89,266	9.5
	65세 이상	276,533	316,527	358,247	374,737	406,129	441,187	35,058	8.6
	비율(%)	(39.9)	(40.8)	(41.4)	(43.1)	(43.4)	(43.1)		
1인당 월평균 진료비 ³⁾⁻⁵⁾	전체	113,612	126,891	140,663	141,086	151,613	166,073	14,460	9.5
	65세 이상	346,161	378,657	409,536	404,331	415,887	429,585	13,69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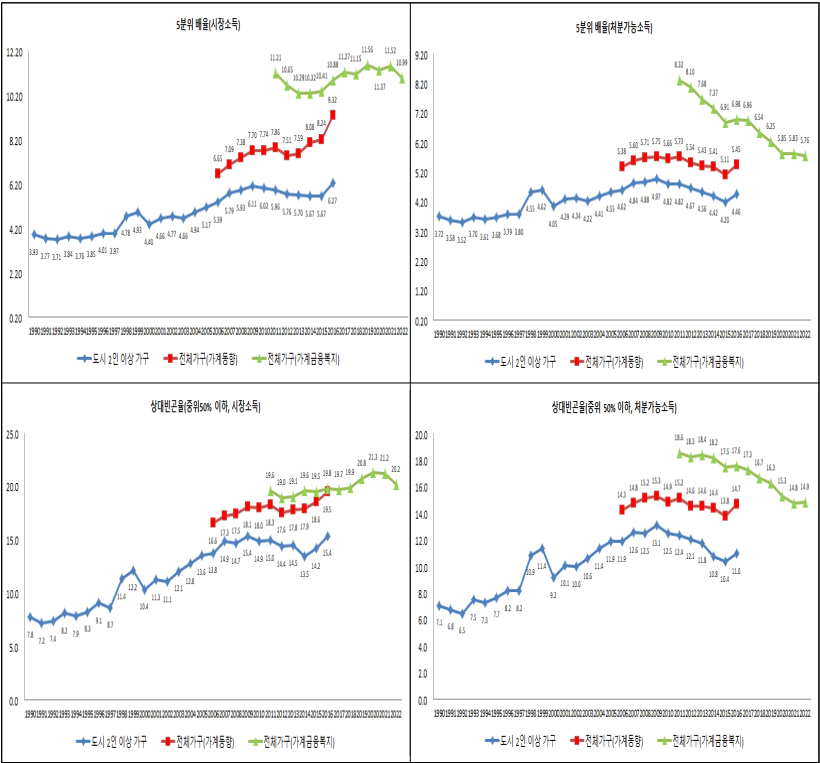
주: 1) 지급 기준, 적용 인구는 연도 말 기준
2)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
3)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 ÷ 평균 적용 인구 ÷ 12개월
4) 2021년 평균 적용 인구: 51,392,452명, 65세 이상: 8,137,798명
5) 2022년 평균 적용 인구: 51,396,852명, 65세 이상: 8,558,395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10.4.).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제2부). 보도자료. 4페이지의 표 〈연도별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을 발췌하였음.

나. 소득분배와 경제전망

소득분배의 변화와 관련해 시장소득 측면에서 보면, 분배 개선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2022년에 소득 5분위 배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괄목할 만한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반면 가처분소득 분배지수는 시간이 지나며 분배 개선 효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조세 등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시장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하

나는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현상이며, 또 하나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림 2-1-4] 소득분배 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재인용

소득분배 개선이 느리게 진행하고, 노동시장 불평등, 자산 양극화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국민 속에서는 사회이동성 약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서 수행한 사회조사에서도 시간이 지나며 세대 간, 세대 내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지난 시기보다 사회이동의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2〉 국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단위: %)

		-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인식										- 세대 내 사회이동가능성인식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39.9	48.4	41.7	39.9	31.0	30.6	29.4	30.3	30.3	27.5	35.7	28.8	28.2	21.8	23.1	23.1	25.5	27.2		
성	남자	41.1	49.7	43.0	40.8	32.3	31.6	30.2	30.9	30.9	28.5	37.0	29.6	29.3	22.8	24.2	23.8	26.6	28.1		
	여자	35.0	43.4	37.5	37.1	27.2	27.8	27.1	28.6	29.2	23.8	31.0	26.1	24.7	19.1	20.1	21.3	22.6	25.0		
연령집단	30세 미만	35.3	44.0	40.1	40.3	31.3	30.3	30.0	27.3	31.3	31.9	43.5	31.1	34.9	28.0	26.0	27.7	27.0	33.5		
	30-39세	41.0	48.0	38.4	35.9	26.7	26.2	24.8	25.6	24.8	27.0	36.3	25.7	27.2	20.1	20.7	21.6	24.5	25.8		
	40-49세	39.6	49.9	40.4	38.8	30.0	27.6	28.0	30.3	24.4	25.7	35.6	26.7	26.7	19.3	22.6	22.7	25.5	26.0		
	50-59세	39.0	49.3	42.4	41.4	31.3	32.1	28.9	31.6	30.4	26.5	35.8	29.4	26.6	21.3	22.6	21.9	27.1	26.2		
	60세 이상	41.2	47.1	44.9	41.8	33.5	33.8	32.6	32.0	32.9	30.4	33.2	31.9	29.8	23.8	24.6	23.9	24.6	27.8		
교육수준	초졸 이하	35.3	40.8	39.2	36.5	26.5	31.8	29.0	24.7	26.6	23.4	27.0	25.3	23.0	18.7	20.2	19.8	19.0	22.0		
	중졸	36.9	42.4	39.8	40.8	30.7	30.0	30.1	31.7	29.1	22.7	27.3	25.6	24.8	20.4	21.4	21.3	22.6	22.7		
	고졸	38.6	47.0	39.9	38.6	31.6	30.5	27.6	30.2	30.6	24.3	32.1	25.6	25.4	20.4	21.0	20.1	22.9	24.6		
	대졸 이상	45.4	55.4	45.3	42.6	32.6	30.4	30.9	31.7	31.4	36.2	46.4	34.6	34.7	25.2	26.6	27.4	30.3	31.5		

주: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과 세대 내 사회이동가능성 각각에 대해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동안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회의 평등을 통해 더 높은 소득과 더 좋은 지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국민 속에서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계층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위와 같은 사회조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회이동성에 대한 분석에서 임금과 관련되어서는 성별 간 기회의 불평등은 여전히 극복되고 있지 못하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관련되어 있는 출신 계층 간 차이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좋을수록 수능 성적 등 소위 ‘인서울’이라는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병기, 2023).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간 차이로 인해 사회이동성에 제약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회이동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이동성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마지막이 평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결과의 평등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기관 등이 예측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023년 국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으며, 2024년도는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였다. OECD에서도 연초의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4년 성장률도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다.

[그림 2-1-5] 한국은행 경제 전망

세계경제 금년 이어 내년에도 완만한 흐름 지속					내년 국내 성장 수출 중심으로 회복				
<세계경제·교역 성장률 전제>					<국내 성장률 전망>				
(%)	2022	2023 ^{a)}	2024 ^{a)}	2025 ^{a)}	(%)	2022	2023 ^{a)}	2024 ^{a)}	2025 ^{a)}
세계경제	3.4	2.9 [2.7]	2.8 [2.8]	3.0	GDP	2.6	1.4 [1.4]	2.1 [2.2]	2.3
▶ 미국	1.9	2.4 [1.9]	1.3 [0.8]	1.8	▶ 민간소비	4.1	1.9 [2.0]	1.9 [2.2]	2.2
▶ 유로지역	3.4	0.4 [0.7]	0.9 [1.3]	1.6	▶ 재화수출	3.6	2.3 [0.7]	3.3 [3.1]	3.3
▶ 중국	3.0	5.2 [5.0]	4.6 [4.5]	4.5	▶ 설비투자	-0.9	-0.4 [-3.0]	4.1 [4.0]	3.7
세계교역	5.1	0.8 [1.7]	3.4 [3.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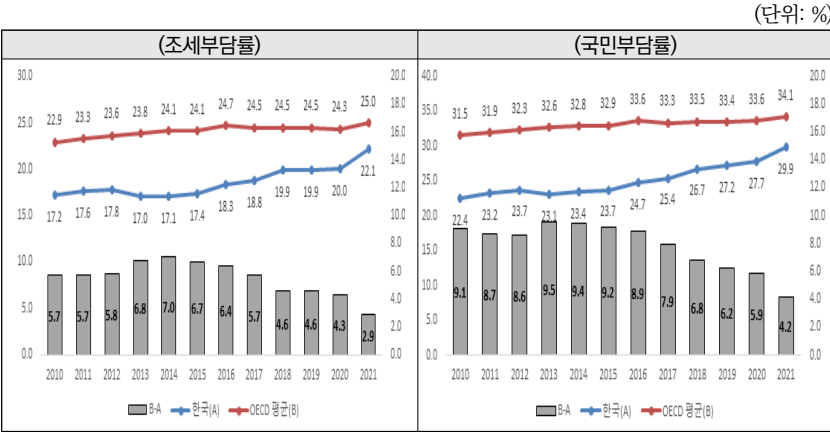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23.11.30.). 경제전망(2023.11월). 보도자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몇 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OECD 국가와의 격차도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속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이 일정 부문 국민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와 더불어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수준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사회보험료 수준을 보면 국민연금(9%), 건강보험(7.09%), 장기요양(0.91%), 고용보험(1.8%(실업급여)+추가), 산재보험(기업주 부담) 등 낮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부담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여기에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고갈의 우려로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1-6]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다. 디지털 기술 발전

AI 기술의 발전 및 빅데이터 축적 및 처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그 변화의 깊이 및 파장이 커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등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 속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혁”으로 정의된다(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9, p.9).

지난 정부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9, p.21)에서 디지털 변환이 초래할 사회보장의 의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불평등 발생 구조의 형성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인지 자본을 구성하는 지식과 기술은 그 특성으로 인해서 소수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지식 및 데이터의 집중은 부와 권력의 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진화된 기술의 활용은 개개인의 식별·추적·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노동구조의 변화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통적인 근로 계약에 근거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셋째, 정보 불평등의 악순환이다. 연령, 지역, 신체 여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정보 격차는 지능정보기술 활용에서의 배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제·사회·문화적 격차를 추동하게 된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은 사회정책의 미래 의제와도 연결된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 발생 구조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디지털 경제의 형성이 부의 집중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랫폼 경제 혹은 가상공간에서의 거래는 현행 조세 체계에서는 과세가 어렵다. 소수에게 집중된, 혹은 익명의 개인 사이에서 거래된 부는 현재의 불평등 수준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추세는 과세의 기반은 약화하는 반면, 시장에서의 분배는 악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추세를 분석

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연구는 마땅히 요구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이 추동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추동하는 노동시장 충격의 범주와 심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전망하고 있다(Frey & Osborne, 2013; Arntz, Gregory & Zierahn, 2016). 이를테면, Frey & Osborne(2013)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자동화로 인해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고위험 일자리가 47%에 이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성욱(2022)은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현재의 흐름이 노동시장을 양극화하고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다수의 연구가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개별 국가들의 집합적 대응에 따라서 충격의 강도는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셋째, 정보 불평등의 악순환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가 만드는 불평등 및 양극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디스토피아만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복지의 디지털화는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기능을 좀 더 효율화하고 촘촘하게 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라는 개념이 해외의 사회정책학계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디지털 복지국가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Alston(2019)은 해당 개념을 “사회 보호와 사회부조 제도가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로 더 자주 추동되면서, 자동화, 예측, 선별, 감시, 추적, 표적, 처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p.2)라고 정의했다. Alston(2019)의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이 복지급여의 지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범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즉, 본인 인증, 급여 자격 심사, 급여의 계산 및 지불, 부정수급 예방 및 탐색,

위험의 점수화 및 범주화, 복지 수급자와 기관 사이의 소통 등이다.

디지털 복지국가가 던지는 도전도 있다. 국가의 방대한 데이터 집적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김수영, 2016). 이를테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정보 처리 내용의 부정확성, 데이터의 소유권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한국은 디지털 복지국가 여건에서 핵심으로 간주되는 개인인증 분야에서 압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번 발급이 되면 변경이 어려운 일률적인 국민식별번호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을 빼고는 유례가 드물다(성준호, 2016). 디지털 복지국가의 명과 암을 동시에 분석하고, 기술 발전을 복지국가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2-1-3〉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과제

국정 과제	관련 보건(의료)정책 과제	세부 보건(의료) 정책 과제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저소득층 지원 강화	• 긴급복지 지원제도 •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필수·공공의료 강화	•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모든 질환 확대 적용, 지원한도 상향 등 • 중증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 강화 * 2단계 시행,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 축소 *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약품비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의료이용 방지 등) * 비급여 관리 내실화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스마트 건강관리	• ICT 기반 동네의원 만성질환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 제공 •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 중심으로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아동 진료체계	•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 정신건강검진체계 단계적 도입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강화, 정신건강 문제 극복 R&D 확대
	비대면진료 제도화	• 의료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 상시적 관리 필요 환자 대상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예방접종 확대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개선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저자 작성.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정해서 보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인프라의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보건의료 관련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들은 <표 2-1-2>와 같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은 코로나19 이후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증가, 감염 방지 목적 디지털(비대면) 검진, 만성질환 관리, 코로나 블루,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KOTRA,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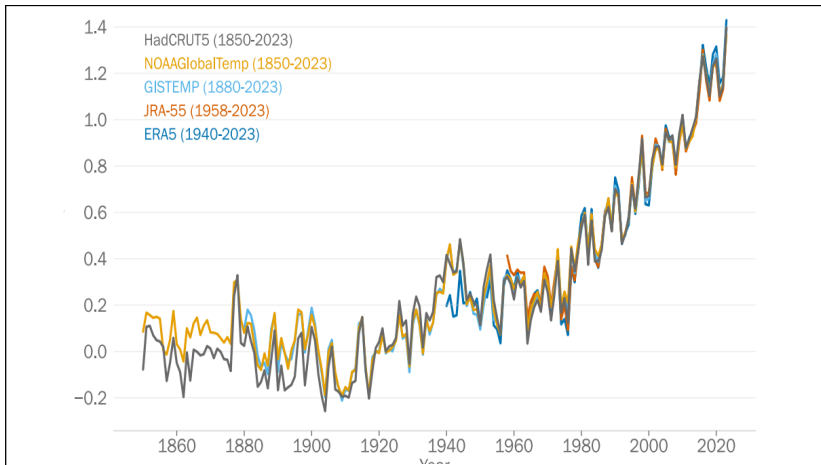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동시에 새로운 스마트 기술에 대한 적응 차이 등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산은 편견과 낙인 등으로 대면 서비스 이용에 심리적 장벽을 가졌던 사람들을 상담과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체제로 이끄는 등 정신건강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전진아 외, 2022).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선행연구는 디지털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고령층이 디지털 정보와 기술 이용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정보화 취약계층으로 남도록 만들 수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노인의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박소영, 정순돌, 2019).

라.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체감되고 있다. 지난 수년 사이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한, 홍수, 가뭄 등의 재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23년은 1850년 지구상의 대기 온도 기록이 작성된 이후 가장 더웠던 해로 추정됐다(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23). 1850~1900년 기간 평균 대기 온도보다 1.4도가 높았다.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2023)은 해수면 온도 역시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후 변화는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과 복지의 기반은 물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한국도 그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상청(2020)은 국내의 평균 기온이 10년에 0.18도씩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수면 수온과 해수면의 높은 상승률도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

[그림 2-1-7] 지구 연평균 온도 변화 추이



주: 그래프는 여섯 가지의 지구 평균 기온 자료를 합쳐 구성한 것임.

자료: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23). Provisional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3. Geneva: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p. 6.

기후 변화의 파장은 전방위적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타격은 전 사회에 균등하게 미치지 않는다. 개인, 사회, 계층, 지역 단위에 따라 기후 변화의 타격은 불평등하게 분포된다. 기후정의(climate justice) 개념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 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이와 같은 기후정의의 정의는 해외에서 규정하는 기후정의와는 일부 내용이 다르다. 이를테면,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기후정의센터에서는 기후정의를 설명하면서 “기후정의는 전 세계의 저소득층 혹은 다양한 인종 공동체, 즉 현재의 문제에 가장 책임이 달한 집단에 미치는 불균등한 영향에 주의한다. 기후정의 관점에서는 기후 변화의 근본 원인을 다루면서 동시에 포괄적인 사회적, 인종적, 환경적 부정의의 의제도 다룬다”(Center for Climate Justice., n.d.)라고 적시하고 있다.

Harlan et al.(2015; 송아영, 2022 재인용)은 기후 위기를 정의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기후정의는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된다. 둘째, 기후 위기의 영향을 부유층과 빈곤층은 불평등하게(unequally) 체감하고 경험한다. 셋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친환경 정책의 영향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 변화를 이렇게 기후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의 역할이 대두된다. ISSA(2023)는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후 위기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째, 농업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빈곤,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인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의 영향력, 특히 건강에의 영향은 국민 대상 기후 변화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KBS, 한국리서치, 2021). 향후 10년 안에 한국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응답자의 93.2%가 '기후 변화'를 위협으로 느껴(매우 위협 41.2%, 다소 위협 52.0%),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91.3%), 감염병 확산(88.9%)보다 높은 사항으로 꼽히기도 한다. 더불어 기후 변화가 '건강 악화'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82.2%로 환경오염의 확산(90.3%), 자연 재난/재해 발생(88.7%), 감염병의 확산(85.2%) 다음으로 영향력을 크게 평가하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기후 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기후 요인이 정신 건강, 그리고 자살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관성이 국외에서 보고되고 있다. 월평균 기온이 상승할 때 월간 자살사망률이 증가했으며(Burke, M., et. al., 2018), 폭염과 가뭄이 자살사망률 증가와 정신병원 입원을 증가와도 연관성을 보였다(Belova, A., et. al., 2022).

임완섭, 황남희, 황주희, 신영규, 이지은, 이주미(발간 예정)³⁾는 기후 위기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기후 위기 불평등 관련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가 포괄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범주를 고려해서, 산재한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정량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융복합 연구의 수행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후 등을 포괄하는 자연과학,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대응 등 안전 분야, 그리고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사회과학 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 위기 불평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의 수행이 요구된다.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이 일반적인 취약계층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들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

3) 해당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으며, 보고서 마무리 과정에서 내용의 일부 수정 및 첨삭이 있을 수 있다.

다. 넷째,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기후 위기가 전 세계를 포괄하는 보편적 위험인 점을 고려해서, 다른 국가들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 건강격차와 건강증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달성하자는 목표하에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은 성, 계층과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총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수명은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70.4세에서 2030년 73.3세까지로 연장하고,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국민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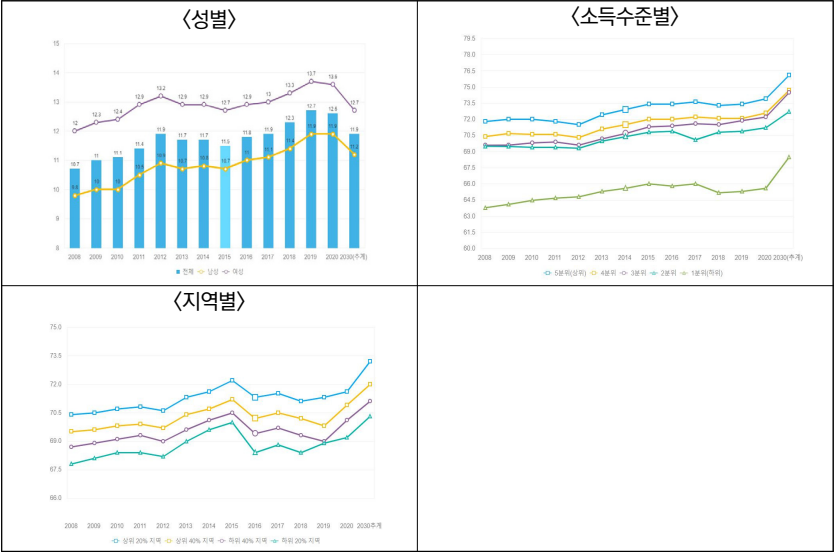
건강수명의 격차를 살펴보면, [그림 2-1-8]에 제시된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남녀 간 건강수명 격차는 1.5세이며, 여성의 건강수명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수준 5분위인 상위 집단의 경우 건강수명이 73.9세로 나타나며, 1분위인 하위 집단의 경우 65.6세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수준 1분위인 하위 집단의 경우 2017년 이후 건강수명이 하향한 상황이어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상위 20% 지역의 건강수명이 71.6세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하위 20% 지역은 69.2세로 나타난다.

4)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추는 것과 더불어 건강수명 상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로 낮추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국민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Health Plan> 5차 계획(Health Plan2030)> 5차 계획(Health Plan2030)).

<https://www.khepi.or.kr/board?menuId=MENU01287&siteId=null>에서 2024.2.13. 인출.

[그림 2-1-8] 성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

(단위:세)



자료: 국민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건강수명) 건강수명통계) 건강수명격차. <https://www.khepi.or.kr/hpn/healthLife/healthLifeDiff.do?menuId=MENU01313> 에서 2024.2.13. 인출.

또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건강격차를 총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해 제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22개 지표 중 13개 지표에서 건강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그림 2-1-9] 참조), 소득 격차는 성인 여자 비만 유병률,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고혈압 유병률,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율, 당뇨병 유병률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지표는 성인 여자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고혈압 유병률, 건강식생활실천 인구 비율, 성인 남자 비만 유병률, 성인 여자 비만 유병률, 성인 남자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성인 남자 현

재 흡연율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검진 수검률 역시 건강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과 소득 모두에서 형평성이 악화 되는 지표는 고혈압 유병률과 성인 여자 비만 유병률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림 2-1-9] 건강격차 지표 현황

중점과제	지표	건강격차 지표 차			비고
		소득	지역	기타	
금연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	감소 (0.0%p)	증가 (1.3%p)	-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	-	감소(계명) (7.6%p)	
질주	성인 남자 연건강증주자의 고위험증주율	유지 (0.4%p)	증가 (1.8%p)	-	
	성인 여자 연건강증주자의 고위험증주율	유지 (0.5%p)	증가 (4.6%p)	-	
신체활동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4.2%p)	감소 (3.2%p)	-	
영양	건강식생활실천 인구비율(만 6세 이상)	감소 (3.3%p)	증가 (2.2%p)	-	
건강검진	일반검진 수검률	-	-	증가(계명) (0.2%p)	
심뇌혈관	고혈압 유병률(30세 이상)	증가 (3.4%p)	증가 (4.3%p)	-	
	당뇨병 유병률(30세 이상)	증가 (0.4%p)	유지 (0.6%p)	-	
비만	성인 남자 비만유병률	감소 (4.9%p)	증가 (2.1%p)	-	
	성인 여자 비만유병률	증가 (5.3%p)	증가 (1.9%p)	-	
노인건강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장애율	증가 (0.6%p, 2017)	유지 (0.6%p, 2017)	-	

주 1. 격차 : 소득격차는 '상·하', 지역격차는 '동·읍면', 계명격차는 '일반·특성화', 대상격차는 '건강보험·의료급여'로 격차의 크기는 그 차이의 절댓값으로 계산
2. 격차분배 : ① 감소 : HWP2020 수립당시 기준년도(88년) 대비 '38년 지류교'에 감소한 경우, ② 유지 : 평균 격차 증감폭이 0에 가까운 경우, ③ 증가 : HWP2020 수립당시 기준년도(88년) 대비 '38년 지류교'에 증가한 경우

자료: 국민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https://www.khepi.or.kr/board?menuId=MENU00743&siteId=null->. 2024.2.13. 인출.

바. 보건 의료 전달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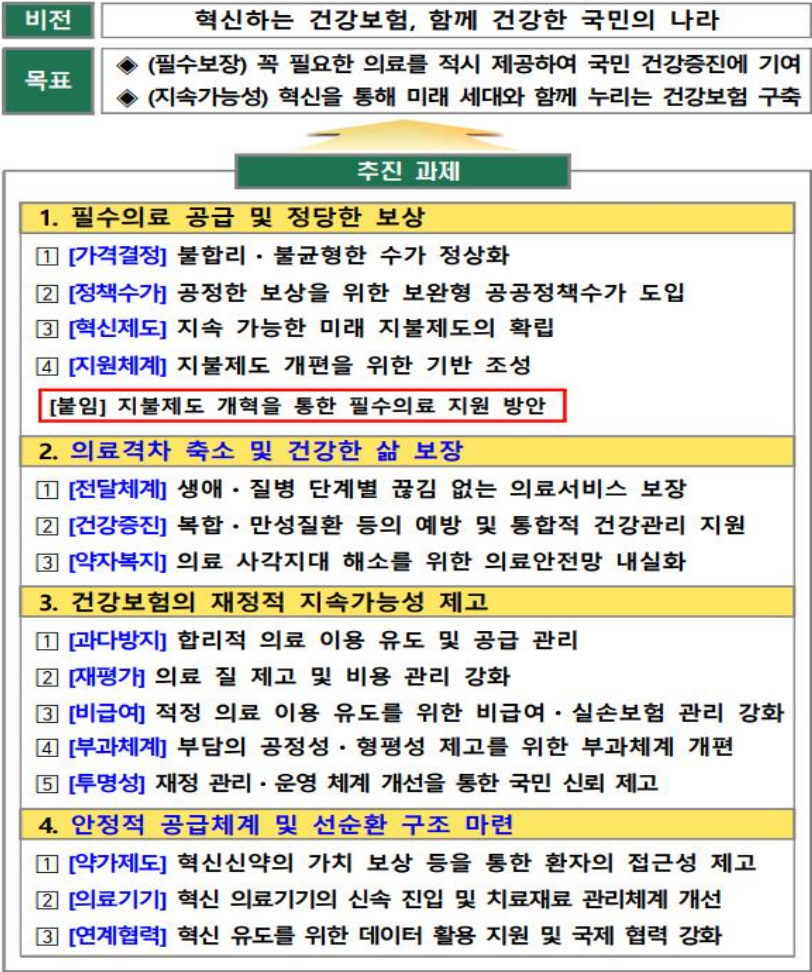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주요한 정책 여 건의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보건 의료 전달체계가 경험하는 지역의 료와 필수 의료의 공백 같은 위기 상황, 그리고 의료비 지출 및 보험료 수 입 정책과 부담의 형평성 문제 같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였 다(보건복지부, 2024.2.2) 우선 보건 의료 전달체계 경험하는 위기 상황 과 관련하여 종합계획에서는 환자의 수도권 대학병원으로의 쏠림이 가속 화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의료인력과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어 지역 간 의료와 건강격차가 악화되는 상황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서울은 89.2%인데 반해 충남은 66.4%, 경북은 63.4%로 낮게 나타나며, 의료인력 역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47명인데 반해 경북은 1.39명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 서울은 38.6명인데 반해 강원은 49.6명, 경남은 47.3명으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공백과 관련하여 종합계획에서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수요가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위험도,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저수익 고위험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에서 보고한 2024년 기준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경우 100%인데 반해 소아청소년과는 25.7%, 흉부외과는 3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와 관련하여 종합계획에서는 앞서 다룬 것처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가 문제와 더불어,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부족 문제를 유발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와 수가 결정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잉된 병상과 장비,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낭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요하게 바라보았다.

[그림 2-1-10]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추진체계도



자료: 보건복지부. (2024.2.2.).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2024-2028. 16페이지를 발췌하였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종합계획에서는 총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8%)에 도달한 것과 관련하여 보험료 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이 증가

하는 것 대비 보험료 수입이 정제하는 것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2021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6%인 데 반해 총진료비 증가율은 7.7%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 여건에 대한 문제 인식에 따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그림 2-1-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2. 외부에서 보는 미래 사회의 주요 키워드

외부 기관에서 바라본 미래 사회의 변화는 무엇일까. 국회미래연구원은 2023년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정책과 관련된 것을 보면, 11대 이슈 중 네 개가 가족, 세대, 빈곤, 고립 등과 연결되어 있다.

고령화와 기술개발 등이 연계된 케어에 대한 혁신, 또한 고령화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들, 가족 측면에서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세대 간 연계, 전통적 부모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모 역할 등을 담고 있다.

빈곤 현상과 관련해서도 기술개발에 기반한 지역별 빈곤 지도와 지역공동체 혁신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미래 주요 이슈로 제시되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진 역시 사회구조 측면에서 미래 이슈로 고령화, 지방 중소도시 소멸과 도시 집중화, 가치 기준의 다양화와 갈등 발생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2-1-4〉 미래 사회의 11개 이슈(1)

구분	이미징 이슈
개인	디지털 시대 스트레스 관리: 새로운 연결성과 실존적 의미의 탐색 (<i>stress*</i> , social connectedness, active aging, rural health, cognitive flexibil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existential philosophy)
	LifeTech: 지능형 기술로 재해석하는 일상 활동의 미래와 케어의 혁신 (<i>activities of daily living</i>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functional limitations, social relationships, activity limitations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unmet care needs, 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residential self-selection, activities change, technology use)
	스마트 웰빙 오아시스: 도시와 가정에서의 테크놀로지 융합을 통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혁신 (<i>physical activity</i> , eye-level greenspace, activity places, sense of community, residential greenness, environmental perception)
가족	스마트 패밀리: 지능형 기술이 만든 새로운 세대 간 연결고리 (<i>family support</i> ,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only-child, family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socio-cultural resilience, parent-child relationship, smart senior care cognition, adolescents, medication adherence, bullying victimization, conduct disorder, stigma)
	디지털 시대 부모 역할의 다면성: 테크노-이모셔널(techno-emotional) 인텔리전스의 부상 (<i>parents</i> , neoplasms, parenting paradox, children's emotions, mothers' well-being,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management, cyberchondria)
공동체	테크노 지형학: 지능형 기술이 재구성하는 빈곤 지도와 지역공동체 혁신 (<i>poverty</i> , geography of poverty(gop), regional poverty, collaborative development, multiscale transport accessibility, rural land consolidation, land system reform)
	고령화 시대 스마트 소셜 네트워킹: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대안들 (<i>social isolation</i> , community participation, social network, financial insecurity, lives with relatives,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aging in place, companion animals)
사회 (도시)	통합적 도시 생태시스템: 스마트 헬스-휴먼 인터페이스의 탄생 (<i>public health</i> , bluespace, urban regeneration, urban green spaces, biobank, community science)
	센서리 도시디자인: 인간의 감각적 차원을 고려한 도시 공간 디자인 탄생 (<i>well-being</i> , neighborhood design, residential satisfaction, geographic accessibility, urban livability, urban social sustainability, travel options, commute time satisfaction, township, soundscape, perceived sensory dimensions(psd), person-environment fit, sociospatial experiences)
	지능형 리더십 르네상스: AI-Driven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신뢰 구축과 인간 중심 서비스화 (<i>creativity</i> , algorithmic decision-making, transparency, pi-shaped skills, algorithm aversion, digital circular economy, knowledge coupling, agile methods, interactivity, technology turbulence, servitization, customer ai-based interaction, ai-crm, digital servitization)
	디지털 도시의 눈(Digital Gaze): 딥러닝과 멀티소스 데이터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안전도시 (<i>safety</i> , road traffic safety, physical activity(pa), neighbourhod perception, built environment, deep learning, multi-source data, street view images)

* 붉은색 키워드: 신규성·확장성 높은 키워드(a); 검정색 키워드: 타분야 파급 키워드(b)

자료: 여영준, 김유빈. (2023).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 :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Future Brief 23-17호(2023.10.23.)

〈표 2-1-5〉 미래 사회의 11개 이슈(2)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가치 다양화 사회	가치의 다변화	초개민주주의화, 극단적 성향의 대립, 복합적 정체성 등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발생하고 가치 기준이 변화
	가치 갈등 발생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며 공정, 정의, 젠더 등 가치관에 대해 세대 간 관점 차이와 갈등 발생
	공공 가치 강조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유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 증가
인구 구조 조의 변화	고령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변화
	저출산	초저출산 사회로 인한 사회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세대 구성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그 중에서도 1인 가구 증가
	다문화사회의 진전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증가로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및 사회적 갈등 발생
	바이오 혁신에 따른 삶의 변화	바이오 기술발전 및 개인 유전체·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및 일상생활 변화
도시의 변화	초연결 스마트시티의 가속	도시인구의 증가와 인프라 노후화, 도시내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도시 공간 설계 및 구축 운영
	메가시티, 메가리전(Mega-region)의 증가	인구, 경제 활동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국토공간 불균형 지속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	수도권 집중 심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 약화

자료: 정의진, 임현, 박노언, 박창현, 지수영. (2021).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슈페이퍼. pp.7-8.

3. 정책환경 변화

사회정책 분야 중 사회보장과 관련된 최근 정책환경의 주요 키워드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생 부문에 대한 관심

이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도 현재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사회보장 분야별로 최근 주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각각의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4차 기본계획은 출산율 제고라는 기존의 정책 목표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였으나, 구성과 내용 면에서 기존 계획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여 미래 대응력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3년 3월 새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고, 저출산정책과 고령사회정책 각각에 대한 새로운 정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먼저, 저출산정책 추진 방향으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조성’을 수립하고 4대 추진 전략과 5대 혁신 분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및 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추진 기반 강화로 제시되었으며, 5대 혁신분야로 돌봄과 보육, 노동시간 제도 개선,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경감, 임신출산 지원으로 설정되었다.

다음으로, 고령사회정책 추진 방향으로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을 설정하고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를 제시했다.

2023년에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이 시작되었다. 보육 및 교육, 국방, 주택 분야의 수급 문제에 대한 탄력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각 분야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추진되기 시작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2023~2027)과 국방중기계획(2023~2027)이 시작되었고,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23~2032)을 비롯해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중기교원수급계획(2024~2027)의 수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보장 분야의 대표적인 계획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12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3.12.12a).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여건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첫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불평등 심화, 고립·은둔 등 새로운 취약계층의 등장, 둘째, 사회보장 공급에 있어 민간참여 확대(=多주체 협력), 셋째, 사회보장제도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현이다.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정책 여건 역시 앞에서 연구진이 제사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우리의 문제 제기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보건복지부, 2023.12.12a).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은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분명한 지원과 취약해지고 있는 재정 부문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추구이다(보건복지부, 2023.12.12a).

[그림 2-1-11]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의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전략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중점과제	①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②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③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④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⑤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⑥ 이용자 중심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⑦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⑧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⑨ 기술 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

자료: 보건복지부. (2023.12.12a). 성공적인 복지국가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보도자료.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기준 조정, 출산 양육, 의료비 등의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취약·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가 있다(보건복지부, 2023.12.12a).

최근에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으로는, 자립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과 고립·은둔자 등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통한 사회적 고립 예방, 기존 소외계층(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방안 마련이 있다(보건복지부, 2023.12.12a).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를 고려한 내용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상병수당제도 도입,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그리고 늘어나는 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긴급복지·긴급돌봄 등의 확충과 제도화를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12.12a).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분야는 같이 발표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 지속 추진, 소득 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필수 의료 강화와 지불제도 다변화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 도입, 행정체계 고도화 등이 연계되어 향후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동되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사회 분야별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별도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수립 배경으로는 양적 및 질적으로 사회서비스의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서

비스 공급 체계가 이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기관의 영세화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보건복지부, 2023.12.12b).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다변화 속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표방하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제도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2-1-12] 제1차 사회서비스기본계획(2024~2028)의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전략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중점 과제	①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④ 품질 관리 강화	⑦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②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⑤ 규제 합리화	⑧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③ 융합서비스 확충	⑥ 공급자 성장 지원	⑨ 제도적 기반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2023.12.12b). 성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보도자료.

첫째, 서비스 확충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유보 통합, 고독사, 노인일자리 등)에 대한 대응, 긴급돌봄 등 확대, 지역 간 발생하는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융합서비스로서 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23.12.12b).

둘째,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분절적 규제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공급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12.12.b). 셋째, 신기술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R&D 확대.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도 제고, 정보기술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12.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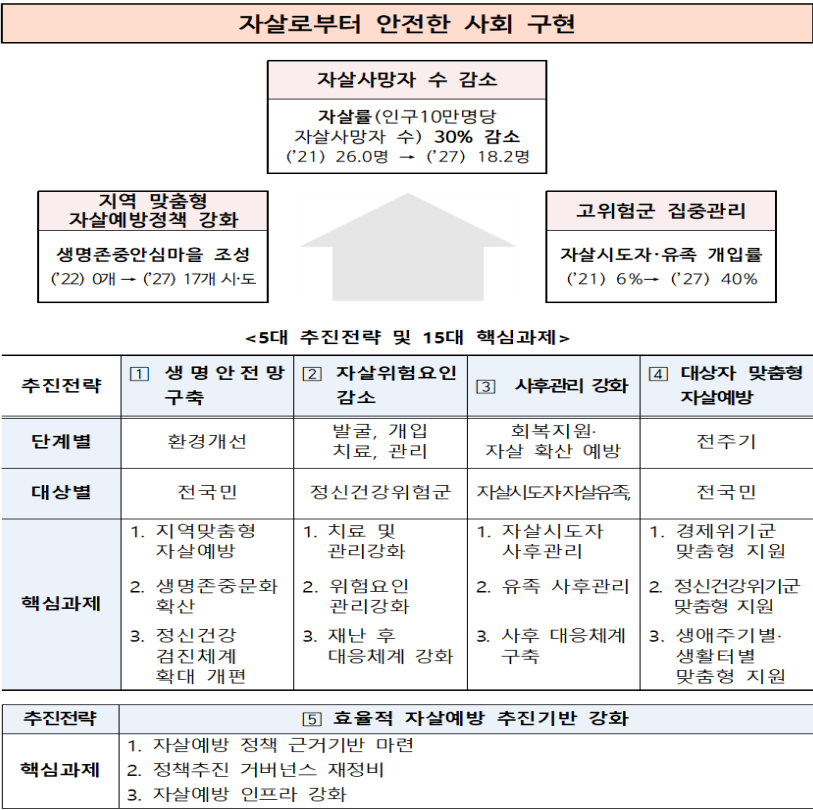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한국의 사회정책 내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한국의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을 보면, 첫째, 기존 사회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속에서 세부적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각 제도별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한계가 보인다. 결국 사회정책이 제도별로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확충될 경우, 한정적 자원 속에서 중복, 통합, 조정 등의 문제 제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 또 한 이번 계획의 한계로 들 수 있다. 둘째,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불평등 및 격차 문제, 사회이동성 약화 등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결국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회정책 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제시, 사회보장제도 간 조정 및 정합성 제고 방향 등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5년 이후를 넘어서는 중장기적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이다. 5년 내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앞에서 지적한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노동환경 변화, 기후 위기 등과 같은 예상되는 주요한 환경변화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대응 혹은 적응 방안을 이번 계획에서는 포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2023)을 추진하였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이전의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범위를 제도 전반으로 확장하여 수립되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한 국민, 든든한 건강보험’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보험 보장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세부 추진 방향은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장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 가치, 지속, 혁신이라는 4대 핵심 가치를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필수 의료 강화 및 의료비 지출의 확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를 고려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 관리와 공정한 부과 체계 운영, 필수 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보상 체계의 도입,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의 방향을 논의한 바 있으며(하재규, 2023.5.4.), 곧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여 왔다(보건복지부, 2023.4.14.). 정부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남아 있는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적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자살사망자 수 감소’,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책 강화’, ‘고위험군 집중관리’라는 목표하에 5대 추진 전략 및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

[그림 2-1-13]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 및 추진방향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3).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p.12.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자살 예방을 지역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며, 정신건강의 검진체계를 확대하고 개편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정신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발굴-개입-치료-관리 단계에서 관리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유족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회복지원 및 자살 확산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네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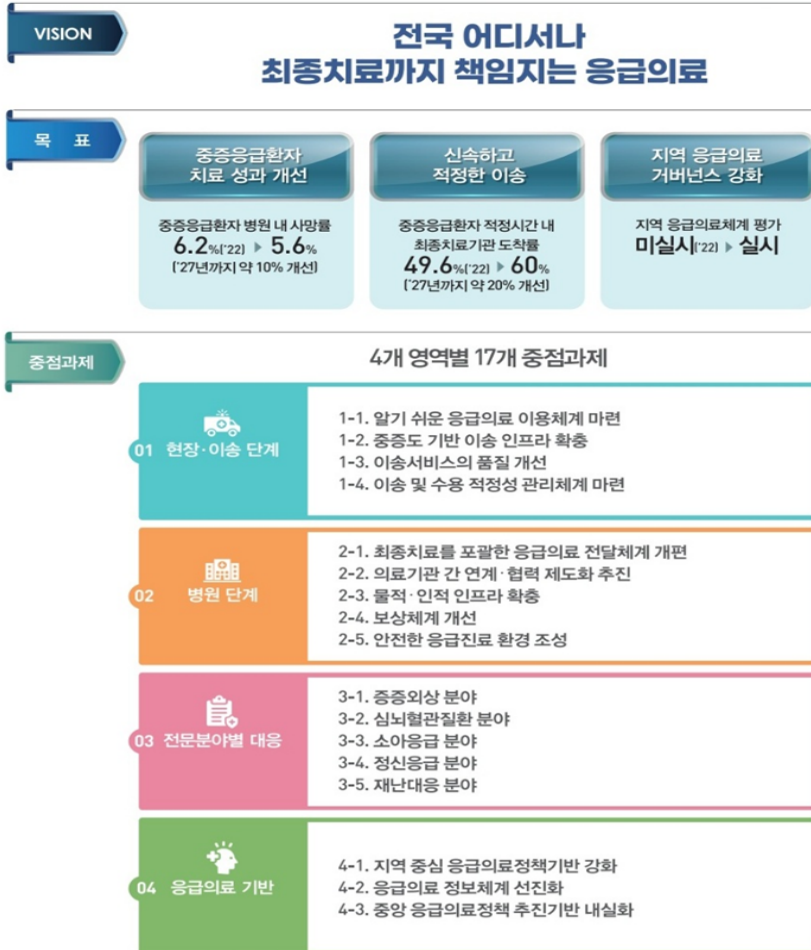
째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군, 정신건강위기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중점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자살 예방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거 기반, 거버넌스, 인프라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마지막으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도 발표되었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이다(보건복지부, 2023.3.21.). 최근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그런데 지역 간 및 의료 분야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4개 영역의 17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3b).

먼저, 현장 및 이송 단계에서는 응급의료 이용체계를 알기 쉽게 마련하고, 이송 인프라의 확충 및 이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송 및 수용 적정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병원 단계에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최종 치료를 포괄하도록 개편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전문 분야별 대응 영역으로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소아응급, 정신응급,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모델 개발 구축 및 연계, 협력 기능 강화, 보편적 진료체계 등에 대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중심 응급의료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정보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앙 응급의료 정책의 추진 기반을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b).

[그림 2-1-14]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 및 추진방향

< 비전·목표 및 중점과제 >



자료: 보건복지부. (2023b). 2023~2027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p. 15.

제2절 빅데이터 분석

1. 주요 Keywords를 통해 본 정책환경 변화

외부적 정책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주요 키워드별 기사 관련 연관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매체 범위는 전국 일간지(11), 경제 일간지(8), 지역 일간지(28), 방송사(5), 전문지(2)에 해당하는 54개 언론사이다. 경제 및 지역 일간지의 경우 전국 일간지의 내용과 중복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전국 일간지와 주요 방송사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⁵⁾ 검색 기간은 2021년부터 최근 시점인 2024년 1월 말까지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불평등이다. 이미 양적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주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변화가 불평등, 양극화, 격차 등 소득분배와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빅카인즈를 통해 불평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노동자, 장애인, 코로나19,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일자리, 노동시장, 양극화, 여성들, 대기업, 취약계층, 지니계수, 불공정’ 등 노동시장, 장애인, 사회구조, 취약계층 관련 키워드들이 도드라졌다. 불평등이라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전통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 등의 키워드들이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들로 나타났다.

5) 전국 일간지에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주요 방송사로는 KBS, MBC, OBS, SBS, YTN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2-2-1] 불평등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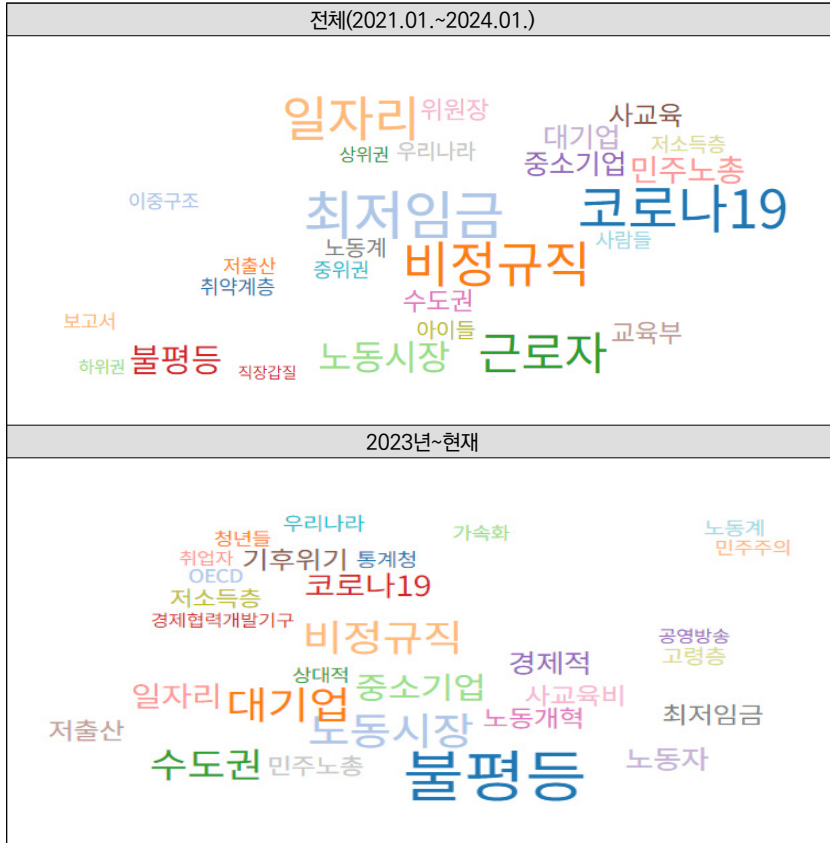


주: 2021.01.~2024.01. 5,688건 기사 전수 기준.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4.01.23. 인출

두 번째 키워드는 소득분배의 또 다른 축인 양극화이다. 양극화는 말 그대로 사회가 이분화되고 중간계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다. 양극화와 관련된 키워드로 ‘최저임금, 코로나19, 비정규직, 노동시장, 불평등, 사교육,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저소득층, 이중구조, 중위권’ 등 노동시장, 계층, 사회적 재난 관련 키워드들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양극화와 관련된 키워드를 다시 뽑아보았는데, ‘불평등, 대기업, 비정규직, 수도권, 노동시장, 기후 위기, 노동시장, 노동개혁, 사교육비, 일자리, 저소득층’ 등의 키워드가 발견되었다. 2021~2022년과 비교하였을 때, 수도권, 기후 위기, 노동개혁 등의 키워드들이 의미하는 바는 지역 간의 격차,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문제,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양극화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2-2-2] 양극화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주: 2021.01.~2024.01. 3,486건 기사 전수 기준.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4.01.23. 인출

불평등과 양극화가 소득분배에 주요하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두 단어를 동시에 적용하여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두 단어에 연계된 키워드들로는 ‘최저임금, 노동자, 코로나19, 민주노총,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시장, 노동계’ 등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살펴보았던 키워드들과 함께 ‘경제위기, 대전환, 사회적 약자’ 등 같은 거시적인 패러다임에 관련된 키

워드와도 연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기준으로 보면 주로 노동시장(불평등, 이중구조 등)과 취약계층이 국민의 많은 관심사였고, 여기에 더해 공정, 경제위기 대응, 지역격차 등이 주요하게 등장하였다. 향후 연구 주제와 방향에 있어 분배적 측면에서 노동시장 개선과 소득분배 대응, 격차(지역, 노동, 소득 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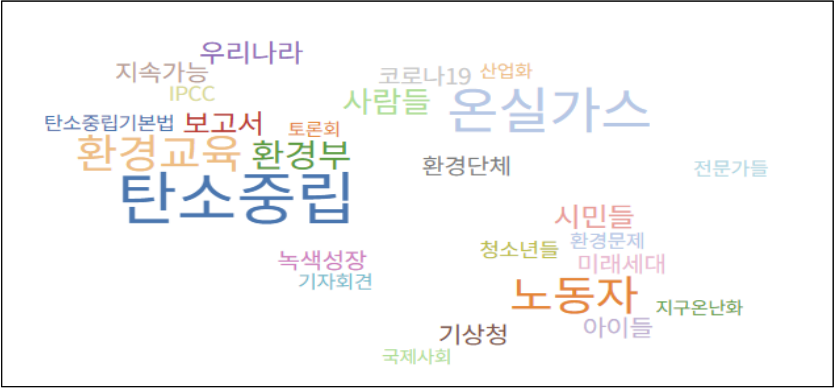
[그림 2-2-3] 불평등 & 양극화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주: 2021.01.~2024.01. 735건 기사 전수 기준.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4.01.23. 인출

세 번째 키워드는 국내외적으로 주요한 미래 사회변화로 여겨지고 있는 기후 위기이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탄소중립, 온실가스, 노동자, 환경교육’ 등의 미래사회 대응 관련 키워드들이 발견되었다. 지속가능, 미래세대 등 앞으로의 대응에 주안점을 두는 키워드들이 중심적으로 나타났다. 아직 환경, 보건의료, 산업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회정책 측면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주제로 판단된다.

[그림 2-2-4] 기후 위기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주: 2021.01.~2024.01. 3,925건 기사 전수 기준.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4.01.23. 인출

네 번째 키워드는 미래사회 대응이다. 미래사회 대응 관련 키워드로는 ‘교육과정, 교육부,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교육정책, 지속가능, 학령인구 감소, 사회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AI’ 등 교육과 관련한 키워드가 가장 도드라졌으며,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지속가능 등의 키워드들이 미래사회 대응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5] 미래사회 대응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주: 2021.01.~2024.01. 144건 기사 전수 기준.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4.01.23. 인출

다섯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던 분야로 여전히 미래 사회에 주요하게 영향을 줄 변화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교육부, AI, 노동자, 일자리, 코로나19, 장애인, 인공지능, 노동시장, 교육과정, 비대면, 산업구조 변화’ 등 교육, 노동시장,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키워드들이 디지털 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산업구조, 장애인 등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소득분배인 양극화, 불평등과도 연계되어 검토가 필요한 주제로 판단된다.

[그림 2-2-6] 디지털 전환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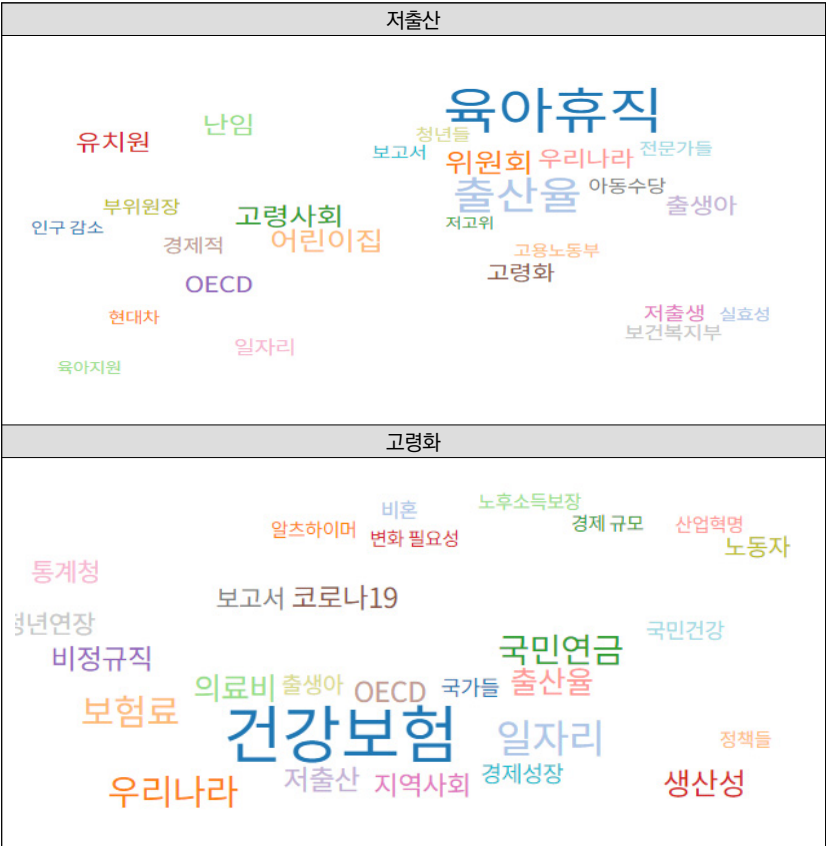
주: 2021.01.~2024.01. 2,269건 기사 건수 기준.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4.01.23. 인출

여섯 번째 키워드는 저출산이다. 다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육아휴직, 출산율, 어린이집, 고령사회, 난임, 유치원, 고령화’ 등 자녀돌봄 분야와 저출산과 항상 동시에 거론되는 고령화에 대한 키워드가 저출산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함께 일곱 번째 키워드는 고령화

이다. 고령화와 관련된 키워드로는 ‘건강보험, 일자리, 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출산율, 비정규직’ 등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노후소득보장체계, 노동시장 등의 키워드가 고령화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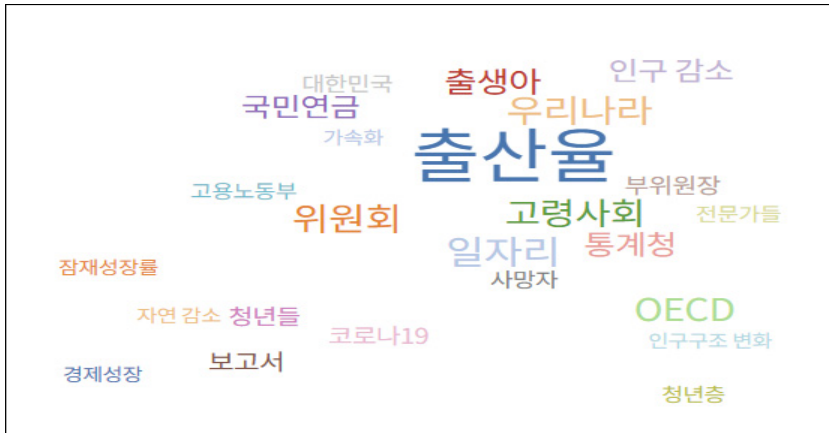
[그림 2-2-7]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주: 저출산 = 2021.01.~2024.01. 7,543건 기사 전수 기준.
고령화 = 2021.01.~2024.01. 7,543건 기사 전수 기준.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4.01.23. 인출

저출산과 고령화를 연관 지어 살펴본 관련 키워드로는 ‘출산율, 일자리, 고령사회, 출생아, 국민연금, 인구감소, 청년들(청년층),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서 살펴보았던 키워드와 비교하였을 때,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은 전반적인 인구구조에 대한 키워드가 역시 연관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미래의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 고령화에 따른 노후 빈곤과 노후소득보장체계 등 방대한 정책들이 연계된 주요한 주제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청년이 함께 등장하고 있어, 심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주제로 볼 수 있다.

[그림 2-2-8]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주: 2021.01.~2024.01. 2,218건 기사 전수 기준.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4.01.23. 인출

여덟 번째 키워드는 인구감소이다. 인구감소는 어느 면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인구감소 관련 키워드는 ‘출산율, 저출산, 외국인, 수도권, 일자리, 지자체, 출생아, 고령화, 지방소멸’ 등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된 키워드와 함께 수도권, 지자

체, 지방소멸 등 지역소멸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키워드 빈도수가 100건 이하이지만, 살펴볼 만한 키워드로는 ‘제조업, 인구절벽,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꼽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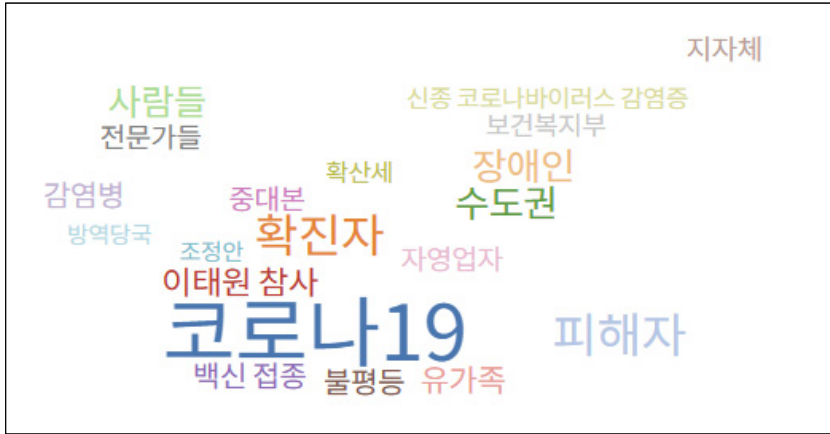
[그림 2-2-9] 인구감소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주: 2021.01.~2024.01. 645건 기사 전수 기준.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4.01.23. 인출

마지막 키워드는 사회적 재난이다. 사회적 재난 관련 키워드로는 ‘코로나19, 장애인, 수도권,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백신 접종, 불평등, 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사회적 재난 사건 및 사고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 문제 관련 키워드가 사회적 재난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계층이 낮을수록 재난에서 입는 타격이 큰 것과 아프면 쉴 수 있는 고용-소득보장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겠다.

[그림 2-2-10] 사회적 재난 관련 워드클라우드(2021.01.~2024.01.)



주: 2021.01.~2024.01. 6,226건 기사 건수 기준.
 자료: 빅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4.01.23. 인출

이상에서 살펴본 9개 주요 키워드별 기사 관련 연관 키워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평등과 관련된 키워드는 ‘노동자, 장애인, 코로나19,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일자리, 노동시장, 양극화, 여성들, 대기업, 취약계층, 지니계수, 불공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은 경제에 이어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불평등,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양극화와 관련된 키워드는 ‘최저임금, 코로나19, 비정규직, 노동시장, 불평등, 사교육,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저소득층, 이중구조, 중위권’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노동 양극화가 심각해졌으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린 상황, 즉 사회이동 및 계층이동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연대전략, 평등 및 연대가치를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기후 위기,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키워드를 정리하면, 기후 위기 관련 키워드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노동자, 환경교육’이 있

고, 미래사회 대응 관련 키워드는 ‘교육과정, 교육부,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교육정책, 지속가능, 학령인구 감소, 사회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AI’이 있으며, 디지털 전환 관련 키워드는 ‘교육부, AI, 노동자, 일자리, 코로나19, 장애인, 인공지능, 노동시장, 교육과정, 비대면,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출산 관련 키워드는 자녀돌봄 분야, 저출산과 항상 함께 거론되는 고령화와 연관된 ‘육아휴직, 출산율, 어린이집, 고령사회, 난임, 유치원, 고령화’가 있고, 고령화 관련 키워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노동시장 등과 관련된 ‘건강보험, 일자리, 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출산율, 비정규직’ 등이 있었다. 인구감소 관련 키워드는 ‘출산율, 저출산, 외국인, 수도권, 일자리, 지자체, 출생아, 고령화, 지방소멸’ 등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키워드와 함께 수도권, 지자체, 지방소멸 등 지역소멸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회적 재난 관련 키워드로는 ‘코로나19, 장애인, 수도권,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백신 접종, 불평등, 자영업자’ 등이 있었다. 사회취약계층일수록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의 경우 아르면 될 수 있는 고용-소득보장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보건복지 분야 주요 키워드

보건, 사회정책 관련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분석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보건의 당시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염병, 방역 등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복지 분야는 ‘서비스’, ‘제공’ 등이 등장하고 정책적으로는 ‘지역’, ‘장애인’, ‘방문’ 등이 많이 표집되었다. 사회

보장 분야는 ‘가구’, ‘사각지대’, ‘센터’ 등 주로 전달체계와 관련된 관심
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2-2-11] 사회보장 분야 소셜데이터(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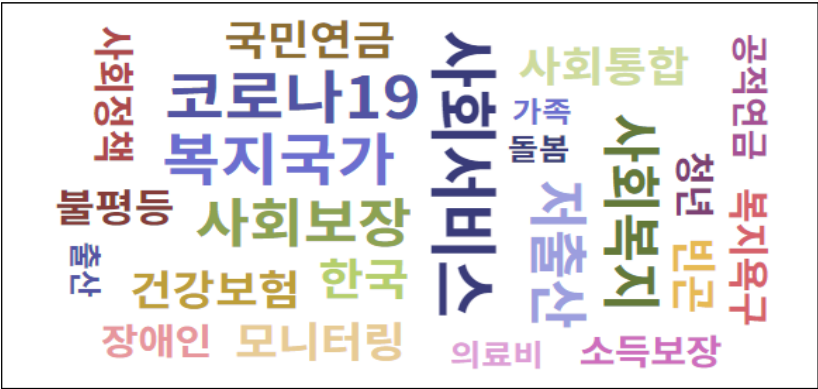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털(소셜데이터). 재인용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동안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전체 기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사회보장”, “코로나19” 등이 주요하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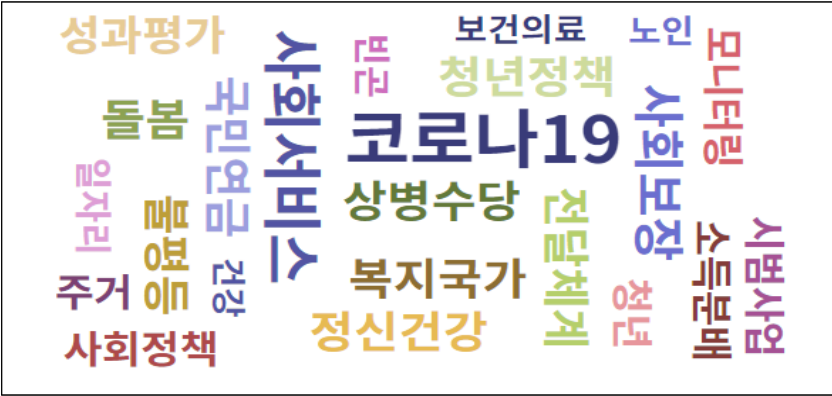
장하였다. 이를 5년 내로 좁혀 보면 “코로나19”, “사회서비스” 등이 역시 주요하게 등장했으며, 새롭게 “상병수당”, “정신건강”, “성과평가”, “돌봄” 등이 등장하였다.

[그림 2-2-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체 기간 주요 키워드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 홈페이지의 “KIHASA 연구 키워드” 2023년 12월 추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repository.kihasa.re.kr/>)

[그림 2-2-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5년 주요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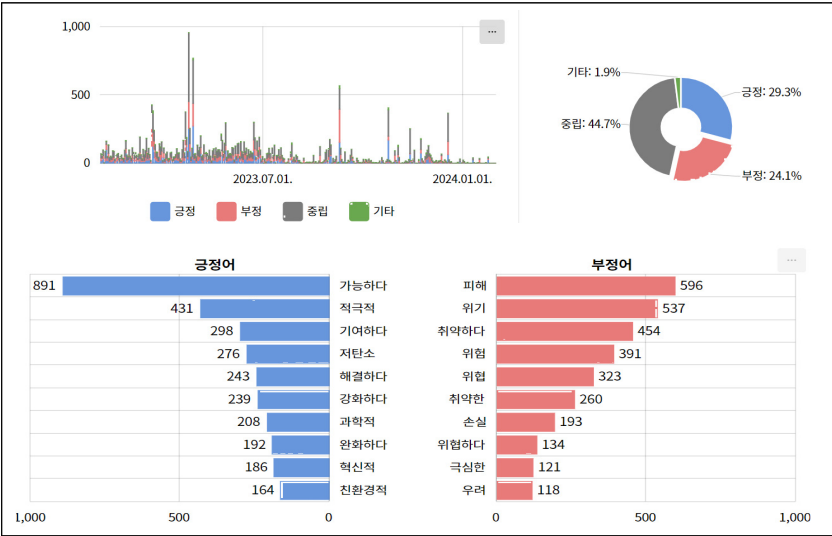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 홈페이지의 “KIHASA 연구 키워드” 2023년 12월 추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repository.kihasa.re.kr/>)

3. 미래 변화 키워드에 따른 감성분석

주요 Keywords를 통해 본 정책환경 변화와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키워드 분석을 정리해보면, 미래 사회 대응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 “기후 위기”, “인구감소”, “디지털 전환”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키워드 3개와 “적응” 키워드를 연결하여 미래 변화 키워드에 따른 감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세 개의 주요 키워드는 보건복지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떠한 감성 키워드가 도출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검토를 통해 미래 사회 대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2-2-14] 기후 위기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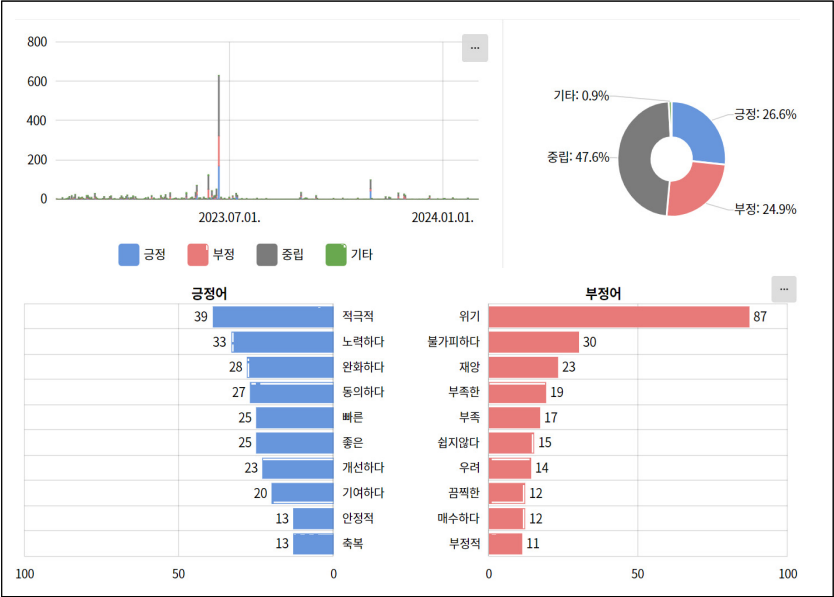


주: 2023.02.~2024.01.
자료: NRC데이터정보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s://www.nrcdata.re.kr/nrc/usr/main.do>(2024.1.31.접속)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기후 위기”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를 결합하여 지난 1년의 단어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2023년 상반기에 많이 언급되었고, 긍정은 29.3%, 부정은 24.1%로 긍정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정의 키워드로는 “피해”, “위협”, “손실”, “우려”, “위기”가 많이 언급되었으며 긍정의 키워드는 “적극적”, “친환경”, “과학적”, “혁신적”, “저탄소” 등의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후 위기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 및 친환경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를 결합한 지난 1년의 단어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2023년 7월 전후 시기에 높은 빈도를 보였고, 긍정은 26.6%, 부정은 24.9%로 나타났다. 부정의 키워드는 “위기”, “재앙”, “우려”, “끔찍”, “불가피” 등이 많이 언급되었고 긍정의 키워드는 “적극적”, “노력”, “개선”, “빠른”, “안정적” 등의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인구감소는 더 이상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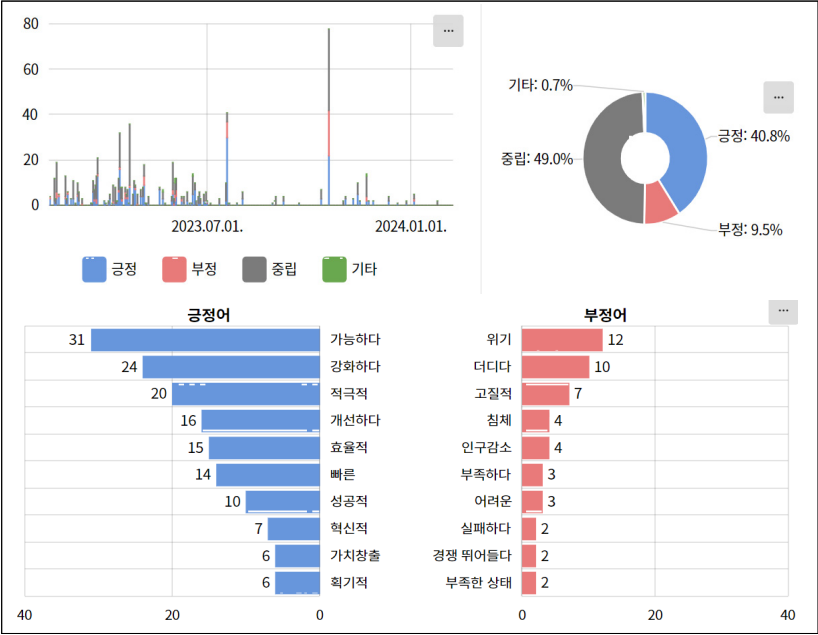
[그림 2-2-15] 인구감소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



주: 2023.02.~2024.01.
자료: NRC데이터정보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s://www.nrcdata.re.kr/nrc/usr/main.do>(2024.1.31.접속)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디지털 전환”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를 결합한 지난 1년의 단어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와 10월, 11월에 높은 빈도였고, 긍정은 40.8%, 부정은 9.5%로 긍정의 비율이 높았다. 부정의 키워드는 “위기”, “더디다”, “고질적”, “침체”, “인구감소” 등이 많이 언급되었고 긍정의 키워드는 “가능”, “강화”, “적극적”, “효율적”, “성공적”, “가치 창출” 등의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의 인식이 높으며,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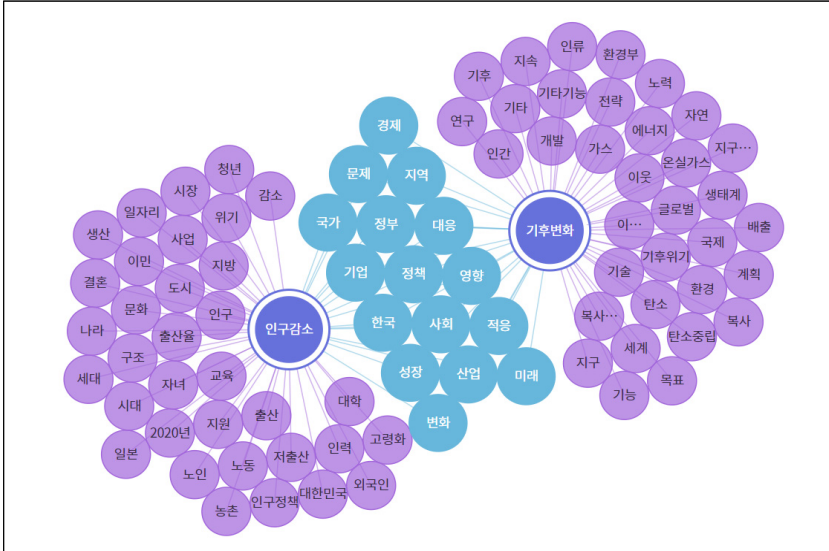
[그림 2-2-16] 디지털 전환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



주: 2023.02.~2024.01.
자료: NRC데이터정보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s://www.nrcdata.re.kr/nrc/usr/main.do>(2024.1.31. 접속)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미래 변화 키워드인 “인구감소 & 적응”, “기후 변화 & 적응”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감소는 “노동”, “고령화”, “인구정책”, “청년” 등의 키워드가, 기후 변화는 “에너지”, “온실가스”, “탄소중립”, “개발”, “연구”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공통적으로 도출된 키워드는 “경제”, “국가”, “정부”, “기업”, “산업”, “미래 변화” 등의 키워드로, 이는 인구감소와 기후 변화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17] 인구감소 & 적응과 기후 변화 & 적응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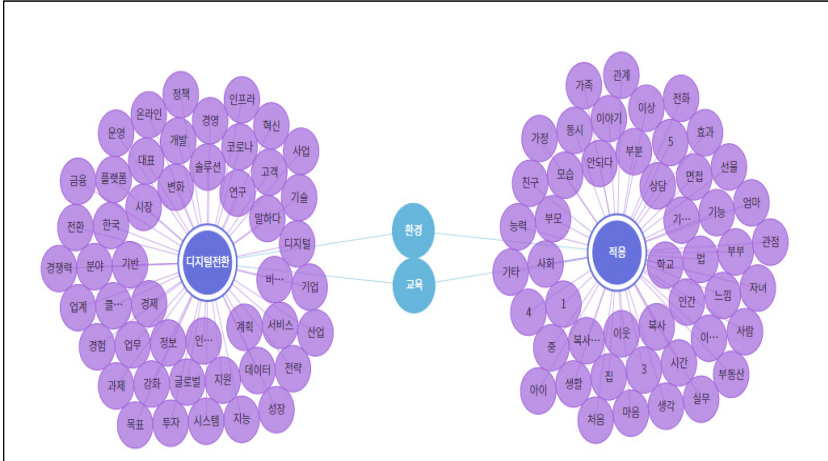
주: 2021.01.~2023.01.

자료: NRC데이터정보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s://www.nrcdata.re.kr/nrc/usr/main.do>(2024.1.31.접속)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미래 변화 키워드인 디지털 전환과 적응 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을 2021년 1월~2023년 1월, 2023년 1월~2024년 1월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공통으로 도출된 키워드는 “환경”, “교육”에서 “변화”, “자원”, “경험” 키워드가 추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2021년,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도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키워드에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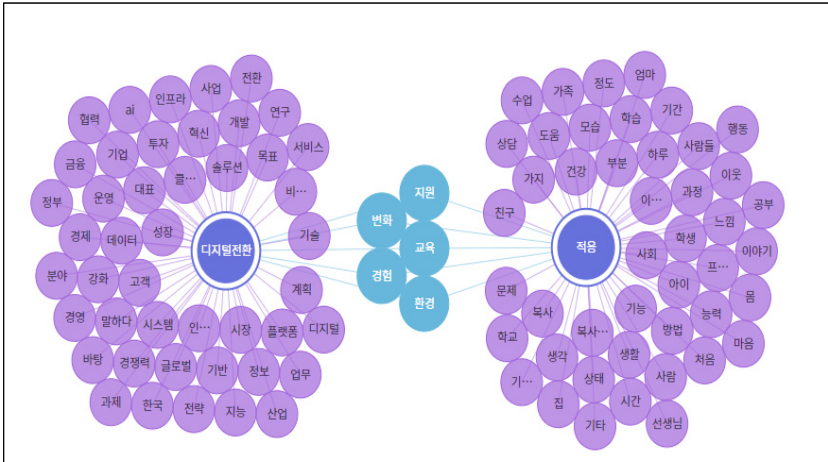
[그림 2-2-18] 디지털 전환 키워드와 적응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주: 2021.01.~2023.01.

자료: NRC데이터정보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s://www.nrcdata.re.kr/nrc/usr/main.do>(2024.1.31.접속)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2023.01.~2024.01.

자료: NRC데이터정보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s://www.nrcdata.re.kr/nrc/usr/main.do>(2024.1.31.접속)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제3장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제1절 (외부)전문가 패널 조사

제2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전문가 조사

제3장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제1절 (외부)전문가 패널 조사

1. 조사 개요

미래의 정책 방향과 정책환경을 예측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조사는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하여 직관적, 탐색적, 그리고 규범적 미래 변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2회 이상의 조사를 통해 추상적, 포괄적 응답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양적 결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응답 내용의 구체화와 양적 결과 전환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판단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며, 동시에 논의 주제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를 도출하고자 미래 변동과 정책환경 변화, 사회정책 영역의 주요 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 등에 대한 전문가 패널 조사를 계획하였다. 전문가 패널 조사는 온라인 서면조사 방식으로 총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는 미래 정책환경 변화와 사회정책 영역의 주요 문제를 제시하는 개방형 설문 조사이다. 1차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와 발생 가능한 사건(events)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회정책 영역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또는 선제적으로 연구분석이 요구되는 주제를 정리하여 영역별로 목록화하였다.

2차 전문가 패널 조사는 1차 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목록으로 정리한

항목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목록으로 정리한 항목과 관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1차 전문가 패널 조사에 응답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업무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분야 14명(27.5%), 사회과학 분야 36명(70.6%), 기타 1명(2.1%)이다. 소속기관은 학교 및 연구기관 43명(84.3%),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6명(11.8%), 언론과 기타는 각각 1명으로, 총 51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표 3-1-1〉 전문가 조사(1차) 응답 현황

(단위: 명, %)

전공 분야	응답 수	비율	소속기관	응답 수	비율
1) 보건의료 분야	14	27.5	1) 학교/연구기관	43	84.3
2) 사회과학 분야	36	70.6	2) 정부부처/정부기관	6	11.8
3) 기타	1	2.0	3) 언론	1	2.0
합계	51	100.0	4) 기타	1	2.0
			합계	51	100.0

자료: 저자 작성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목록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과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할 연구로서의 타당성을 최소 1점부터 최대 9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2차 조사에는 1차 조사 응답 완료자 51명 중 94.1%인 48명이 2차 조사 응답을 최종 완료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2〉 전문가 조사(2차) 응답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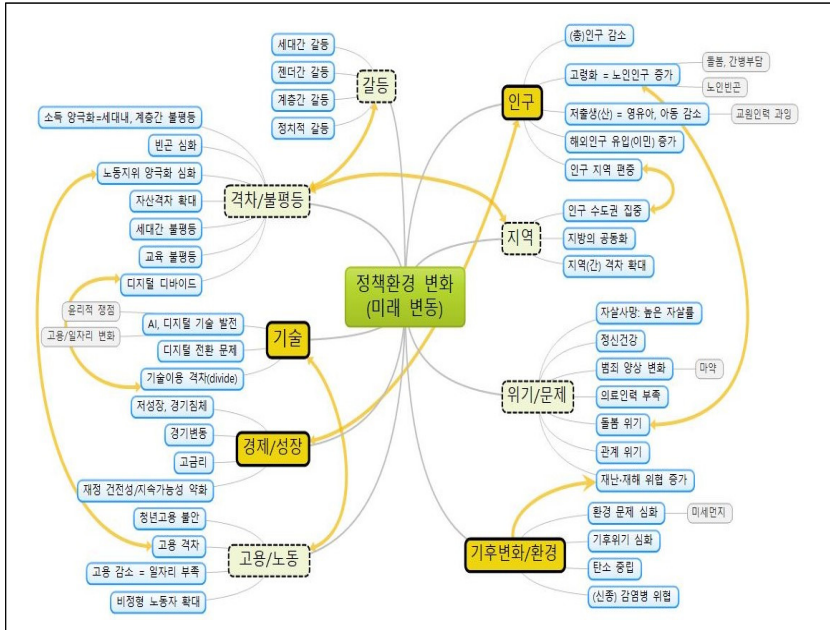
전공 분야	응답 수	비율	소속기관	응답 수	비율
1) 보건의료 분야	13	27.1	1) 학교/연구기관	40	83.3
2) 사회과학 분야	34	70.8	2) 정부부처/정부기관	6	12.5
3) 기타	1	2.1	3) 언론	1	2.1
합계	48	100.0	4) 기타	1	2.1
			합계	48	100.0

자료: 저자 작성

2. 1차 조사 결과

1차 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향후 약 5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의 일상과 국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전문가 패널 조사를 통해 사회정책을 둘러싼 정책환경 전반의 변화 추세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의 응답은 미래 변화 예측을 위해서 사회정책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건(events)이나 변화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확인한 사건이나 변화를 발생시키는 동인(driving forces)과 변화 추세를 식별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정리한 정책환경 변화의 동인과 추세는 [그림 3-1-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그림 3-1-1] 향후 5년간 사회정책의 정책환경 변화 동인과 추세



자료: 저자 작성

전문가의 응답 결과,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사회정책 환경변화를 견인하는 동인(driving forces)은 인구 고령화, 기술 발전, 저성장, 그리고 환경·기후 변화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정책환경 변화의 주요 추세로는 격차와 불평등 심화, 사회갈등 증가, 고용 불안정과 노동시장 양극화, 지역 간 격차, 그리고 사회문제 심화에 따른 새로운 위기 발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격차와 불평등 심화는 전통적인 빈곤 문제, 소득 양극화, 자산 격차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교육 불평등, 노동시장 지위 격차, 또한 디지털 디바이드 등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의 증가로 연계된다. 계층 간 갈

등이 고착되는 상황에서 젠더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치적 갈등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격차와 불평등 심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 추세로 전문가들은 지역 간 격차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총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역 간 격차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현실화될 것이다.

고용구조 악화와 일자리 감소는 기존의 격차와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저성장, 경기침체 지속 등은 고용 불안과 비정형 노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동, 기후 변화, 기술 발전은 새로운 사회문제와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며, 이는 사회정책을 통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난 위협,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 증가는 사회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돌봄 위기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사회정책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 추세를 기반으로 사회정책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항목을 목록화하였다. 전문가들이 최소 5회 이상 중복하여 지정한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을 전제로 구분하였다. 1차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추출된 사회정책 영역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의 목록은 <표 3-1-3>과 같다.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총 52개 항목이며, 보건·의료 영역 15개, 소득보장 영역 10개, 사회서비스 영역 12개, 인구가족 영역 10개 그리고 기타 영역 5개 항목이다.

〈표 3-1-3〉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목록

항목	
1. 보건의료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보건의료체계
	신종 질환 및 감염병, 팬데믹 위기 대응력 강화
	약물(마약) 및 중독자 관리
	다양한 인구 집단별 정신건강 문제
	높은 수준의 자살(사망)률 대응
	건강보장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통합·일원화
	의료비 증가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실손보험 등)의 관계, 역할 재정립
	디지털 기술 활용과 보건의료정책
	공공의료 역할과 기능 정립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방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공백) 문제
2. 소득보장	생애주기별, 성별, 가구형태별, 경제활동 유형별 빈곤·불평등·격차에 대한 분석과 대응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인 빈곤 문제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자산 불평등
	빈곤·불평등·격차의 세대 간 전승/전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기본소득, 최저소득,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등) 도입과 시행
	대규모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시적 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기술 발전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 증가에 따른 소득보장체계 재편
	연금제도 개혁
	연금 급여, 사회수당 확대에 따른 공공부조 개편 방안

항목	
3. 사회서비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재구조화: 컨트롤타워, 중앙-지방, 기능 조정 등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 예측
	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방안
	육구 기반 개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방안 및 공적 제공기관 확충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전문성 제고
	돌봄서비스 외국인 제공인력 증가에 대한 검토·분석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관리 방안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인구감소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AI 기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 활용 방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유보 통합) 방안
4. 인구가족	미래 가구 구성 변화(1인 가구, 다양한 형태 가구 등) 예측
	1인 가구 증가와 사회보장정책 대응
	가족 형태의 다양성 증가와 정책적 대응 방안
	인구감소 시대와 사회보장 재정
	저출생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과 대응 전략
	출산 가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
	육아휴직 일반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국제 인구가동: 외국인 유입 증가 현황과 영향 분석
	다문화, 이주배경 가족 지원과 사회통합
5. 기타	지역 간 인구가동과 생애주기별 인구가동의 원인과 추세
	대규모 재난 대응과 사회보장정책
	조세지출제도와 재분배
	기후 변화 및 대응 정책이 빈곤·불평등, 재분배,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갈등(세대, 계층, 젠더 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지역별 보건복지 수요 분석과 공급 전망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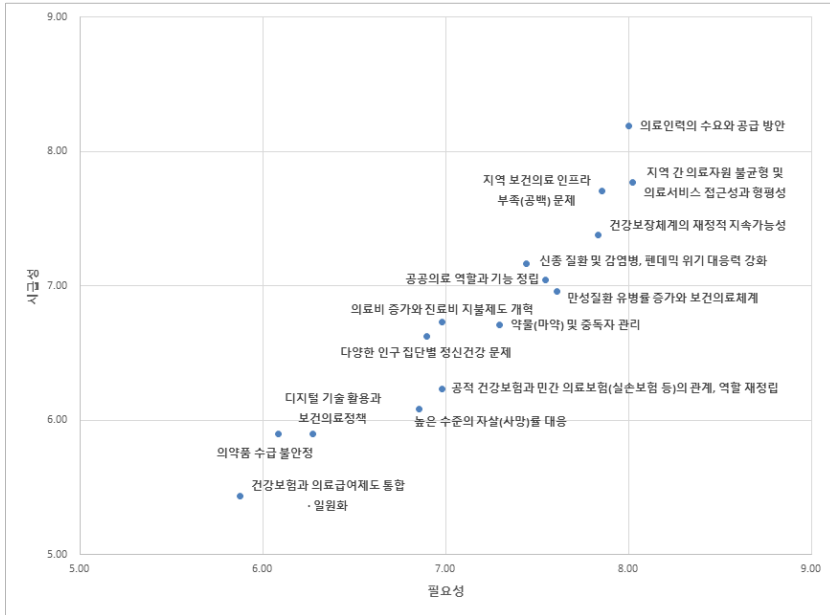
2. 2차 조사 결과

가. 보건의료 분야

1차 조사 응답 결과를 종합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과제는 대부분 정책 연구 수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1~9점 범위에서 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중에서 시급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방안’이었고, 이 과제는 필요성 또한 8.0점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연구과제는 필요성이 8.02점으로 가장 높고, 시급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공백) 문제’, ‘건강보장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신종 질환 및 감염병, 팬데믹 위기 대응력 강화’, ‘공공의료 역할과 기능 정립’,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보건의료체계’, ‘약물(마약) 및 중독자 관리’, ‘의료비 증가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다양한 인구집단별 정신 건강 문제’,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실손보험 등)의 관계, 역할 재정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기술 활용과 보건의료정책’, ‘의약품 수급 불안정’,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통합·일원화’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편으로 보이지만, 절대적인 점수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3-1-2] 보건의료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9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의한 평균 점수임.
 자료: 전문가 조사(2차)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할 정책과제로서의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은 ‘건강보장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공백) 문제’,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의 수행 타당성 점수가 높은 편이다. 다음은 ‘공공의료 역할과 기능 정립’, ‘의료비 증가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방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통합·일원화’, ‘높은 수준의 자살(사망)률 대응’의 수행 타당성 점수 순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다양한 인구집단별 정신건강 문제’, ‘디지털 기술 활용과 보건의료정책’의 수행 타당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적인 점수의 수준이 낮지는 않다.

[그림 3-1-3] 보건의료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9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의한 평균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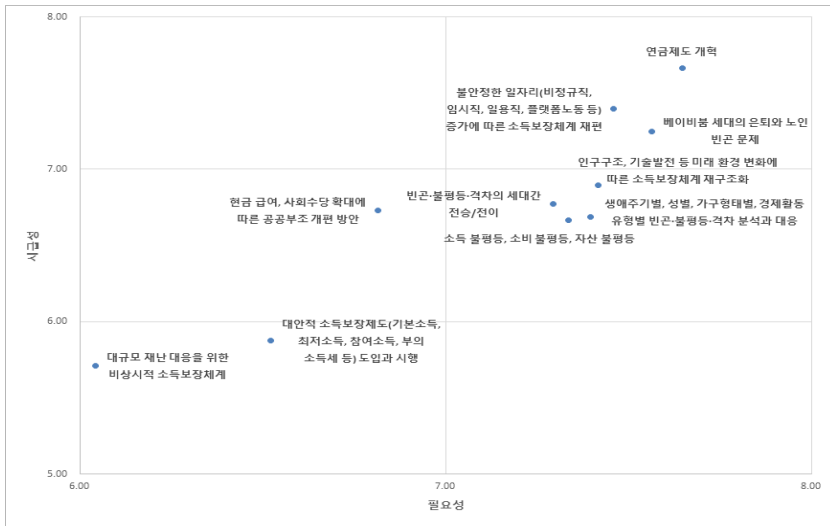
자료: 전문가 조사(2차)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나. 소득보장 분야

소득보장 분야 연구과제의 필요성은 6점 이상, 시급성은 5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인 빈곤 문제’,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 증가에 따른 소득보장 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다. ‘인구구조, 기술 발전 등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생애주기별, 성별, 가구형태별, 경제활동 유형별 빈곤·불평등·격차 분석과 대응’, ‘빈곤·불평등·격차의 세대 간 전승/전이’,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자산 불평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다음 수준으로 높은 그룹으로 확인된다. ‘현금 급여, 사회수당 확대에 따른 공공부조 개편 방안’은 제시된 연구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비해 시급성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기본소득, 최저소득,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등) 도입과 시행’은 시급성에 비해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시적 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낮은 편으로 보이지만, 절대적인 점수의 수준이 낮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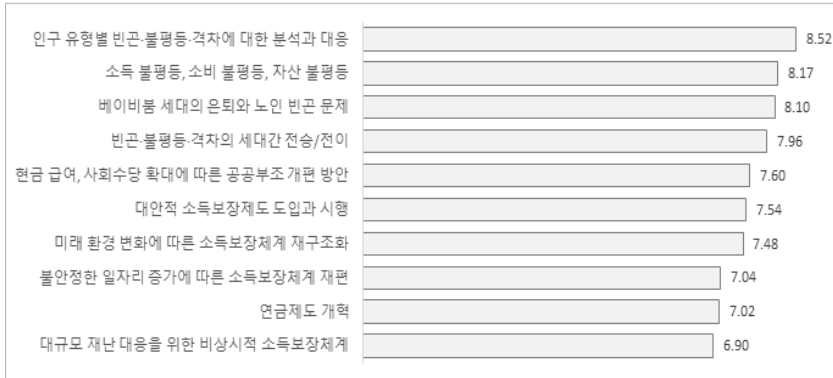
[그림 3-1-4] 소득보장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자료: 전문가 조사(2차)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할 소득보장 분야 연구과제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생애주기별, 성별, 가구형태별, 경제활동 유형별 빈곤·불평등·격차 분석과 대응’의 점수가 가장 높게 확인된다. 다음은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자산 불평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인 빈곤 문제’, ‘빈곤·불평등·격차의 세대 간 전승/전이’의 순으로 수행 타당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에 따른 소득보장체계 재편’, ‘연금제도 개혁’, ‘대규모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시적 소득보장체계’의 수행 타당성은 낮은 편으로 보이지만, 절대적인 점수의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3-1-5] 소득보장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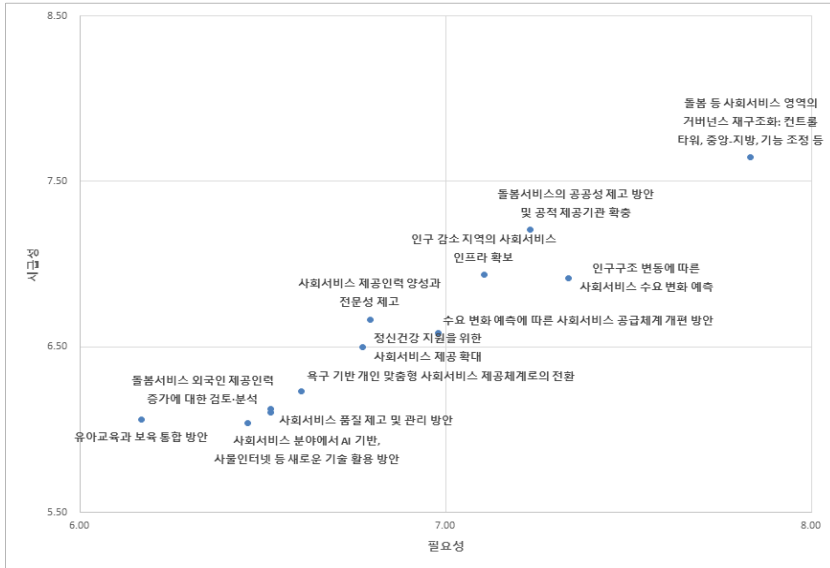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9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의한 평균 점수임.
 자료: 전문가 조사(2차)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전반적으로 5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재구조화: 컨트롤타워, 중앙-지방, 기능 조정 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다음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방안 및 공적 제공기관 확충’,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 예측’, ‘인구감소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보’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방안’,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전문성 제고’,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의 점수가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육구 기반 개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 ‘돌봄서비스 외국인 제공인력 증가에 대한 검토·분석’,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관리 방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AI 기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 활용 방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방안’의 필요성과 시급성 점수가 낮아 보이지만, 절대적인 수준이 낮지는 않다.

[그림 3-1-6]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자료: 전문가 조사(2차)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과제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할 타당성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재구조화: 컨트롤타워, 중앙-지방, 기능 조정 등’,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 예측’, ‘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방안’이 모두 7.9점 이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방안 및 공적 제공기관 확충’, ‘인구감소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보’, ‘육구 기반 개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의 전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전문성 제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방안’의 수행 타당성 점수가 낮게 보이지만, 5.54점으로 절대적인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3-1-7]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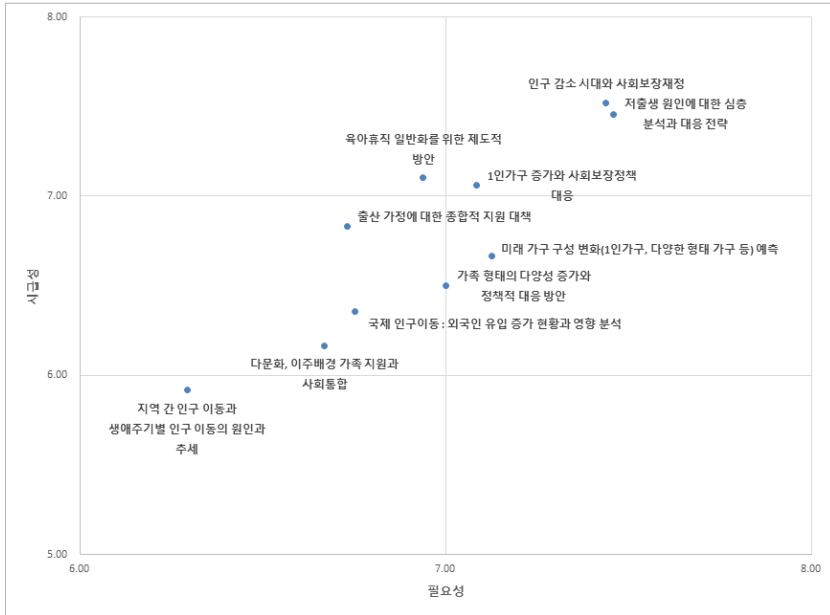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9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의한 평균 점수임.
자료: 전문가 조사(2차)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라. 인구가족 분야

인구가족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은 5점 이상, 필요성은 6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인구감소 시대와 사회보장 재정’, ‘저출생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과 대응 전략’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 밖에 ‘1인 가구 증가와 사회보장정책 대응’, ‘육아휴직 일반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출산 가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 ‘미래 가구 구성 변화(1인 가구, 다양한 형태 가구 등) 예측’, ‘가족 형태의 다양성 증가와 정책적 대응 방안’, ‘국제 인구이동: 외국인 유입 증가 현황과 영향 분석’이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그룹으로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다문화, 이주배경 가족 지원과 사회통합’, ‘지역 간 인구이동과 생애주기별 인구이동의 원인과 추세’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게 보이지만, 절대적인 점수의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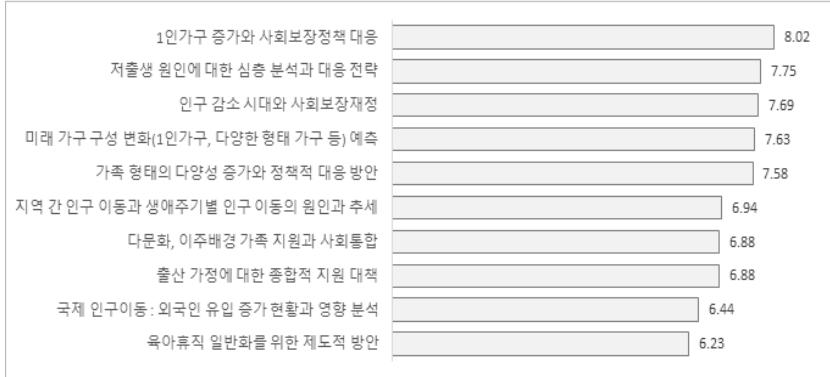
[그림 3-1-8] 인구가족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자료: 전문가 조사(2차)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할 인구가족 분야 연구과제로서의 타당성이 가장 높은 과제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보장정책 대응’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저출생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과 대응 전략’, ‘인구감소 시대와 사회보장 재정’, ‘미래 가구 구성 변화(1인 가구, 다양한 형태 가구 등) 예측’, ‘가족 형태의 다양성 증가와 정책적 대응 방안’의 수행 타당성 점수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지역 간 인구이동과 생애주기별 인구이동의 원인과 추세’, ‘다문화, 이주배경 가족 지원과 사회통합’, ‘출산 가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의 순으로 확인된다. ‘육아휴직 일반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국제 인구이동: 외국인 유입 증가 현황과 영향 분석’의 수행 타당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절대적인 점수의 수준이 낮지는 않다.

[그림 3-1-9] 인구가족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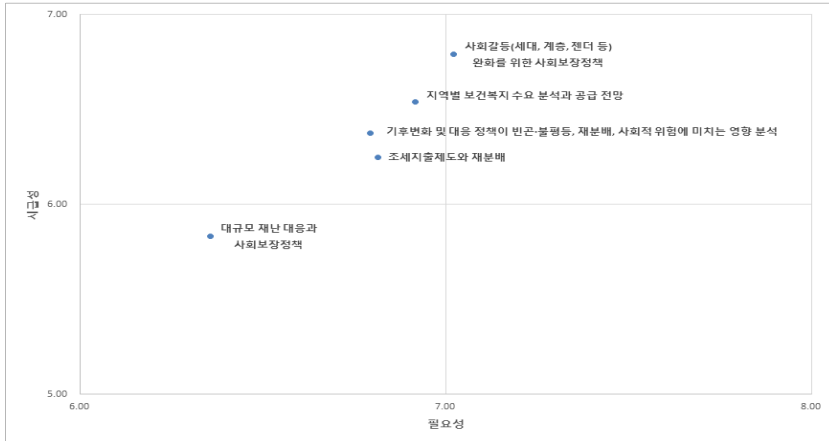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9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의한 평균 점수임.
 자료: 전문가 조사(2차)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마. 기타 분야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가족 분야로 분류하기는 모호하여 기타 분야로 종합한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중에서도 ‘사회갈등(세대, 계층, 젠더 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지역별 보건복지 수요 분석과 공급 전망’, ‘기후 변화 및 대응 정책이 빈곤·불평등, 재분배,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세지출제도와 재분배’의 순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편이다. ‘대규모 재난 대응과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필요성이 6.35점, 시급성이 5.83점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점수의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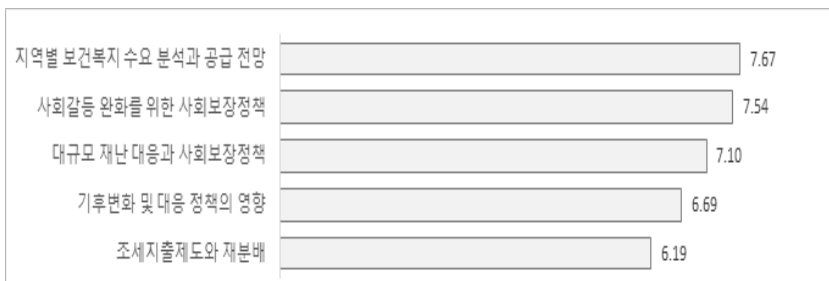
[그림 3-1-10] 기타 분야 연구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



자료: 전문가 조사(2차)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기타 분야 연구과제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할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지역별 보건복지 수요 분석과 공급 전망’이다. 다음은 ‘사회갈등(세대, 계층, 젠더 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대규모 재난 대응과 사회보장정책’, ‘기후 변화 및 대응 정책의 영향’, ‘조세지출제도와 재분배’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3-1-11] 기타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타당성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9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의한 평균 점수임.
 자료: 전문가 조사(2차)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제2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전문가 조사

제1절의 전문가 조사는 원외 전문가가 중심이었다면, 제2절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38인의 원내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응답 전문가가 주로 참여 중인 연구 분야를 중복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소득보장 22.5%, 사회서비스 19.6%, 보건 및 의료 13.7%, 저출산·고령화 12.7%, 재정·통계 11.8%, 지역복지 및 전달체계 9.8% 순이었다.

〈표 3-2-1〉 연구자 대상 설문 응답 현황(중복 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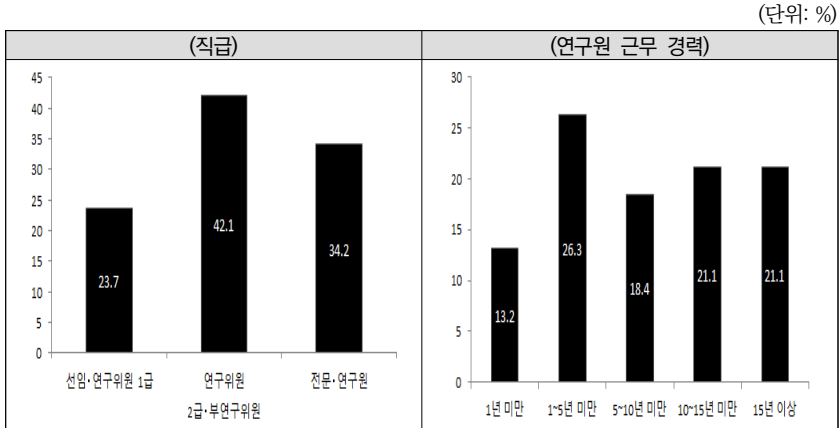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비율
1) 인구	9	8.8
2) 저출산·고령화	13	12.7
3) 사회서비스(노인·아동·장애인 등)	20	19.6
4) 보건·의료	14	13.7
5) 소득보장	23	22.5
6) 지역복지·전달체계	10	9.8
7) 재정·통계	12	11.8
기타	1	1.0
합계	102	100.0

자료: 저자 작성

연구원의 응답자 직급별로 보면, 연구위원2급·부연구위원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연구원급이 34.2%,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 1급이 23.7%를 점유하고 있다.

근무경력별로 보면, 1~5년 미만이 26.3%로 많았지만, 중장기 이상 연구경력인 10년 이상이 42.2%로 이번 설문에 연구 경험이 많은 전문가 참여가 많았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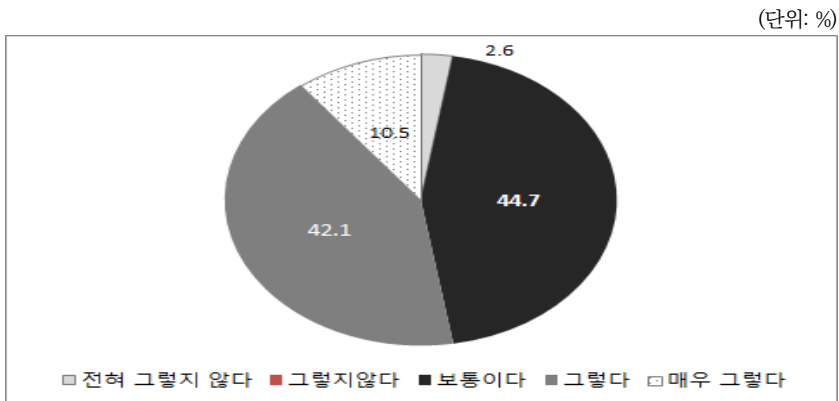
[그림 3-2-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근무 경력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원자료

그동안 추진한 과제에 대한 설문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 비율이 52.6%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부정적 견해는 2.6%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2] 연구과제의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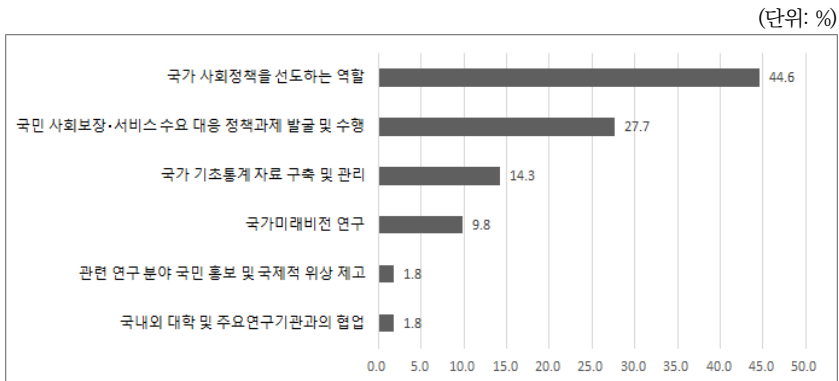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원자료

별도 의견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변화에 대해 연구기획 기능 작동” 혹은 “환경변화에 부합된 연구과제 수행”, “(사회적) 현안·(국정과제 등)주요의제 등 연구과제 수행”, “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 수행”, “연구자의 의견, 만족도 등을 수렴하여 과제 수행” 등을 이유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조사 설문을 기반으로 보면, 현재 기관의 과제 수행이 어느 특정 주제에 치우쳐 연구되기보다는 연구자의 의견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44.6%의 연구자가 ‘국가 사회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정책과제 발굴 및 수행’이 27.7%로 나타나, 이를 주요한 지향점으로 보고 있었다.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에서와 거의 유사하게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임을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3-2-3]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향후 지향점(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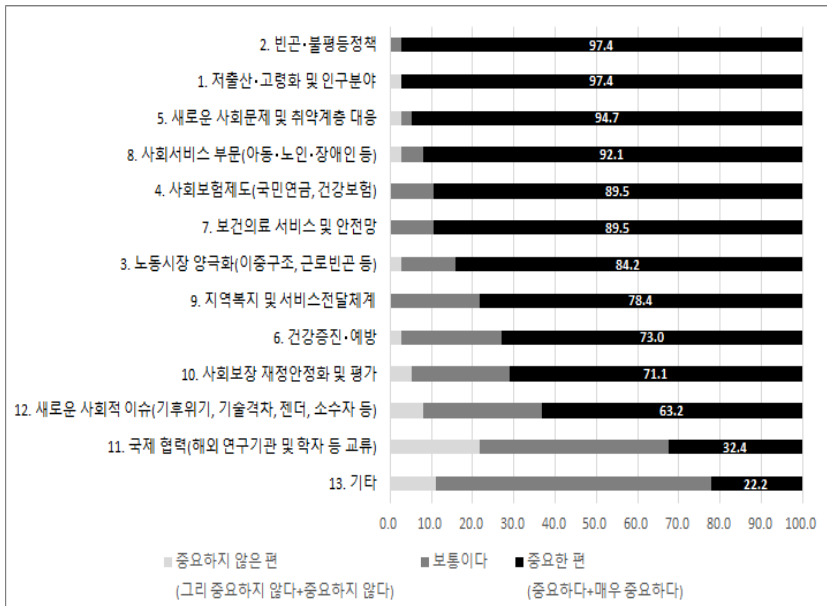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원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향후 중점을 두고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설문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분야와 빈곤·불평등 정책 연구 분야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 나왔으며, 사회문제 및 취약 계층 대응, 사회서비스(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응, 보건의료서비스 및 안전망 등이 유사한 수준에서 주요한 대응 분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 마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3-2-4] 향후 출연연구기관이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연구 분야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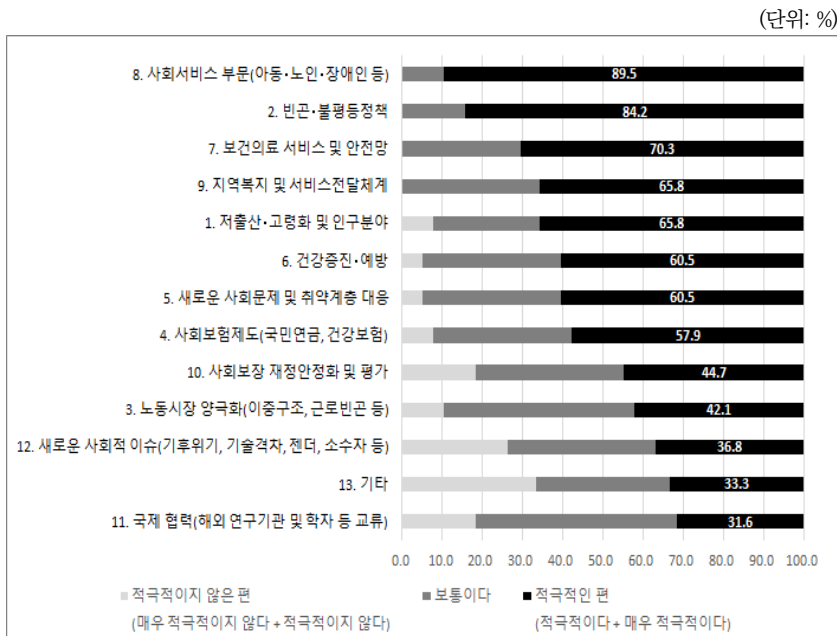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사결과. 원자료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의 대응 정도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필요성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다른 의

견을 보여주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보면, 사회서비스 부문(아동·노인·장애인 등), 빈곤·불평등 정책, 보건의료서비스 및 안전망,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분야, 지역복지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서 긍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소 낮은 평가를 보여준 영역은 노동시장 양극화 대응, 사회보장 재정 안정화 및 평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기후 위기, 기술격차, 소수자 등), 국제협력 분야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연구기관의 수행 과제 등을 보면, 연구기관의 고유 목적에 부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신규 사업이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기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연구자 역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5]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원의 대응 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원자료

중기적으로 향후 연구와 정부정책에 영향을 줄 변화를 분야별로 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와 관련 서비스, 건강보험, 건강증진, 감염병 등과 관련된 의견이 많이 제안되었다. 이외에도 건강격차, 재정안정, 빅데이터 등에 대한 소수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저출산·인구 분야는 인구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 지역소멸(격차 등)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장기요양, 아동·영유아 건강, 1인 가구 및 평가 등이 향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주요하게 담겨져 있다.

소득보장 분야는 소득보장체계 개편, 재정안정, 빈곤·양극화 격차 문제, 노동시장 등을 들고 있으며, 소수의견으로 삶의 질과 IT 등과 같은 기술 발전 등의 영향을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접근성, 전달체계, 재정안정 및 인력(종사자 등)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돌봄,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재정·평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 재정 전망, 재정안정은 물론 평가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근원 연구 등과 관련한 의견이 많이 제안되었다. 기타 분야에서는 아직 연구기관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소수자(이민 등), IT 등 디지털 전환과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대응, 가족구조와 소득보장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문제를 향후 연구와 정부 정책에 주요하게 영향을 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특징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문제(1인 가구 등 가족구조)와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재정안정,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많은 연구자가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외에 전통

적인 연구 분야인 사회서비스, 소득보장, 돌봄 등과 소수자, 지역과 전달 체계 등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 3-2-2〉 중기적으로 연구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변화

분야	연구 및 정책 영향
1. 보건의료 분야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정신건강 전문가 지역사회 자발적 참여, 복지와 보건의 연계
	임출산에 대한 지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이 약화되는지 연구, 새로운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은 없는지 연구
	신종 감염병 위기 및 의료격차(의사 부족, 지역 간/전공간 격차), 청소년/청년층 자살, 중독 문제
	정신건강
	보건의료 재정 안정성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 빈곤층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
	인구집단 및 지역 간 건강불평등/ 보건의료자원의 지역 격차 완화
	질병예방, 건강증진
	상병수당의 보편적 확대에 대한 평가, 비만 인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파장과 사전예방 의료적 대응
	의료체계의 지속과 지원의 적정성 유지 방안
	보건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분석할 기관의 신설 및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관련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재정 안정
2. 저출산· 인구 분야	인구감소/ 인구문제 모니터링
	인구변동의 주요 원인 분석, 전망 부분 연구 강화해야/ 인구변동에 대한 지역 사례 연구
	장기요양 내실화
	고령자 사회참여, 보육정책
	저출산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주거와 노동의 해결방안 마련
	지역 간 인구격차에 대응 관련 연구 필요함
	영유아 건강
	지역소멸 대응 기금 효과성 평가, ICT 기술을 접목한 아동-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혁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설계 및 이를 통한 예측 모형 개발과 검증 그리고 노인인구의 재교육 및 재사회화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법 고안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1인 가구
	정책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분야	연구 및 정책 영향
3. 소득보장 분야	공공부조제도 평가 및 위상 재정립
	소득보장체계 재편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시장 변화
	소득보장 재정 안정성
	기술 발전과 최저소득 보장 방안
	노인 소득보장
	노동-소득-삶의 질 양극화의 확대와 대응방안
	연금의 세대 형평성을 위한 개혁과 논리 구축
	국가의 소득 격차에 대한 정확한 현재 상황 인식과 이를 보완할 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 데이터 및 국민 소득 데이터 수집 방식 및 범위, 대상자 등의 선정에 대한 연구
	소득 다양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
4. 사회서비스 분야	빈곤 완화, 소득 안정성 보장 정책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점검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의 직무기술 향상 관련 연구(디지털 기술 활용 포함)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연금, 건강보험 등 전문 공단이 존재하는 분야 외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등의 개발과 실태조사가 더 의미 있게 활용 필요.
	지역사회 돌봄, 탈시설화
	사회서비스 분야 재정 안정성
	1인 가구 중장년 등 고립 가구 관련
	지역소멸과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공급인력 부족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관련 연구 필요함
	돌봄서비스 확대
	서비스 제공인력 부족에 대응한 ICT 기술의 접목, 인력 재조정 등에 관한 연구
	합리적 서비스 축소 방안과 로드맵
5. 재정·평가 분야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산출 및 검증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서비스의 질을 고려한 공/사적 돌봄의 역할 및 체계 정립
	평가 내실화를 위한 지표 생산 고도화
	사회보장 재정 전망/ 사회보장 재정의 분야별 추세 분석과 균형 있는 지출 방향 제시
	연구 방법론 고도화
	인구감소와 재정 확보 방안
	건강보험, 건강증진기금 활용 합리화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재정 철학의 정립
	국가 재정을 유연하게 쓰기 위한 방법 고안 및 이를 적절히 평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 신설
	사회보험 및 지자체 사회보장 지출의 지속가능성

분야	연구 및 정책 영향
6. 기타 분야	이민자 지원 및 관련 정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위험의 외주화 및 이주화
	디지털, 인공지능과 사회보장
	성소수자 관련 가족 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기후 위기 및 기후 난민 관련 정책 등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으로 하는 차별인식 연구 등을 제한함
	다문화 가정 지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제도 개선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예측 모델 및 발병 시 대처 시나리오 작성 이를 바탕으로 한 훈련계획 설립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원자료

중기적으로 연구기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달체계와 관련된 보건복지 연계, 의료지원체계와 더불어 정신건강, 건강증진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추가로 빅데이터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포함되어 있다.

저출산·인구 분야는 인구,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연구와 관련 모니터링, 생애주기에서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 기타 데이터 기반 모형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보장 분야는 앞의 분석과 거의 유사한 소득보장제도 관련 체계, 재구조화, 평가 등과 연금에 있어서는 재정안정 부문 등이 중기 과제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돌봄과 관련된 돌봄지원, 전달체계 등과 사회서비스 인력과 관련된 실태, 미래 기술과 연계된 지원방안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재정·평가 분야는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변화, 사회정책별 재원 마련 및 평가, 기타 제안 등이 있으며, 기타 분야로는 소수자(이민, 다문화 등)와 코로나19 이후의 영향인 감염병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과제로 제안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연구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과 향후 연구기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 등이 중요성 측면에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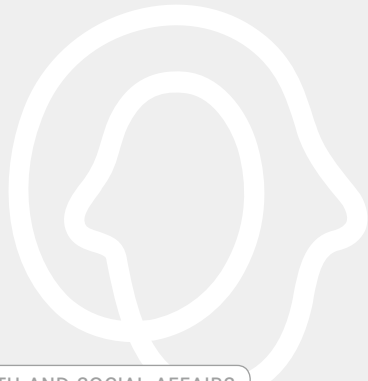
침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들 과제가 현재와 중장기 측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연구와 정책과제임을 보여준다.

〈표 3-2-3〉 중기적으로 실행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

분야	연구 및 정책 영향
1. 보건의료 분야	보건과 복지 연계, 지역사회 중심의 취약계층 의료지원체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건강관리 지원 정책
	상병급여, 정신건강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정책
	유형별 맞춤형 사전예방적 의료 접근방안과 기존 정책의 효과성
	보건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분석할 기관의 신설 및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관련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과제
2. 저출산· 인구 분야	지역별 인구문제 변화 모니터링
	저출산 연구들의 종합 및 쟁점 분야에 대한 원 차원의 결론 도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강화
	인구변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동에 따른 새로운 사회 위험 연구
	보육정책,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영유아 건강증진/ 생식건강 증진
	저출산 및 고령화 분야 정책의 엄밀한 효과성 측정,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
	정책 평가 내실화, 정책 평가 환류 체계 거버넌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설계 및 이를 통한 예측 모형 개발과 검증 그리고 노인인구의 재교육 및 재사회화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법 고안
	고령화 인력 활용

분야	연구 및 정책 영향
3. 소득보장 분야	공공부조제도 평가
	소득보장제도 표준화와 통합
	노동시장 변화 및 불평등, 사회보험 운영기반 개혁
	재정 안정성, 특히 연금 분야
	노인 소득보장
	큰 틀에서 노인빈곤을 대응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국가의 소득 격차에 대한 정확한 현재 상황 인식과 이를 보완할 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 데이터 및 국민 소득 데이터 수집 방식 및 범위, 대상자 등의 선정에 대한 연구
4. 사회서비스 분야	타부처 급여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전달체계
	제도 간 유기적 연계 지원
	지역사회 돌봄 및 탈시설화 추진과제, 사회서비스 인력 관련 연구, 사회서비스 질 평가 정책
	건강취약계층 돌봄지원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한 ICT 기술의 접목방안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산출 및 검증
5. 재정·평가 분야	분야별 참여 사회보장 재정 및 평가 연동
	일반회계 재정지출 사업 재정전망
	방법론 고도화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위기
	정책별 재원 확보 방안
	국가 재정을 유연하게 쓰기 위한 방법 고안 및 이를 적절히 평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 신설
6. 기타 분야	이민자의 사회보장
	다문화 가정 지원
	이민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보건, 사회복지, 노동, 교육 등 분야 별 대응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예측 모델 및 발병 시 대처 시나리오 작성 이를 바탕으로 한 훈련계획 설립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원자료



제4장

사회정책 분야별 대응 연구과제

제1절 보건 및 사회정책 연구동향 분석

제2절 사회정책 중장기 설정 방향에 대한 검토

제4장 사회정책 분야별 대응 연구과제

제1절 보건 및 사회정책 연구동향 분석

이번 절에서는 2021~2023년 3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보건 및 사회정책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3개년도 연구 동향 분석에 활용된 과제는 총 653개로, 2021년 207개, 2022년 209개, 2023년 237개이다. 과제 구분별로 살펴보면, 수탁과제가 443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과제 120개, 기본과제 65개, 수시과제 25개이다. 용역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240개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부처가 64개, 공공기관 58개, 연구회 및 연구기관 48개 순이다.

〈표 4-1-1〉 분야 및 용역기관별 과제 현황

(단위: 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전체		207	209	237	653
과제 구분	기본	21	23	21	65
	일반	38	38	44	120
	수시	12	5	8	25
	용역	136	143	164	443
	자체과제	71	66	73	210
용역기관별	정부부처-보건복지부	75	76	89	240
	정부부처-기타 부처	21	20	23	64
	정부부처-위원회	8	6	8	22
	지자체	1	0	4	5
	공공기관	17	20	21	58
	연구회 및 연구기관	14	19	15	48
	민간	0	2	4	6

주: 저자 작성.

최근 3년간 수행된 653개 과제별로 각각 키워드를 2~4개 정도 도출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연구 주제별 분류는 연구과제명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연구 주제가 한 분야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최근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도출 및 연구 주제별 구분은 공동연구진이 각각 분류하였으며, 공동연구진 간의 검증을 진행하였다.

1. 연구 주제별로 살펴본 키워드

연구 주제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사회보장 일반이 633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 327개, 보건의료 322개, 소득보장 207개, 인구와 가족 173개이다.

〈표 4-1-2〉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의 연구 주제별 키워드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계
사회보장 일반	225	220	188	633
보건의료	141	99	82	322
소득보장	71	81	55	207
사회서비스	125	111	91	327
인구와 가족	57	45	71	173
계	619	556	487	1,662

주: 저자 작성

과제 구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본과제는 사회보장 일반,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과제는 사회보장 일반, 인구와 가족이 높았다. 수시과제로는 사회보장 일반,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스의 비중이 높았으며, 용역과제에는 사회보장 일반, 사회서비스, 보건의료가 높았다.

〈표 4-1-3〉 최근 3년간 수행된 연구 주제 및 과제 구분별 키워드

(단위: 개)

구분	기본	일반	수시	용역	계
사회보장 일반	78	149	28	378	633
보건의료	41	32	6	243	322
소득보장	29	27	18	133	207
사회서비스	43	25	13	246	327
인구와 가족	12	86	5	70	173
계	203	319	70	1070	1,662

주: 저자 작성

용역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체 과제는 사회보장 일반, 인구와 가족의 비중이 높았으며, 발주처가 보건복지부인 경우는 사회보장 일반,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의 비중이 높았다. 기타 부처는 사회보장 일반, 보건의료의 비중이 높았으며, 위원회는 인구와 가족, 사회보장 일반의 비중이 높았다. 그 밖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사회보장 일반,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높았다.

〈표 4-1-4〉 최근 3년간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용역기관별 키워드

(단위: 개)

구분	자체 과제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정부부처- 기타 부처	정부부처- 위원회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회 및 연구기관	민간	계
사회보장 일반	255	229	48	18	4	32	44	3	633
보건의료	79	134	48	3	0	39	17	2	322
소득보장	74	69	16	10	1	26	10	1	207
사회서비스	81	143	27	7	1	36	28	4	327
인구와 가족	103	30	0	22	4	6	8	0	173
계	592	605	139	60	10	139	107	10	1,662

주: 저자 작성

2. 키워드 분석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의 키워드 빈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빈도가 20개 이상 분석된 키워드만 살펴보면, 사회보장, 해외, 가족, 고령화, 실태조사, 청년, 성과평가, 저출산, 보건의료, 코로나 19, 사회서비스, 법정계획이 있다. 2021년도에는 해외, 고령화, 청년, 사회보장, 코로나19 등에 대한 키워드의 비중이 높았으며, 2023년도에는 사회보장, 보건의료, 가족, 저출산의 키워드가 상승하고 있다.

〈표 4-1-5〉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의 키워드(20개 이상)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계
사회보장	11	10	22	43
해외	17	13	13	43
가족	6	6	20	32
고령화	15	8	9	32
실태조사	1	14	14	29
청년	12	10	7	29
성과평가	9	9	10	28
저출산	9	7	12	28
보건의료	4	1	22	27
코로나19	11	9	3	23
사회서비스	6	7	9	22
법정계획	2	9	9	20
계	103	103	150	356

주: 저자 작성

빈도가 20개 이상 분석된 키워드를 과제 구분별로 살펴보면, 기본과제에서는 사회서비스, 해외, 청년의 비중이 높았으며, 일반과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가족, 사회보장, 해외의 비중이 높았다. 용역과제에서는 사회보장, 해외, 성과평가, 실태조사, 청년, 보건의료, 법정계획의 비중이 높았다.

〈표 4-1-6〉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 구분별 키워드(20개 이상)

(단위: 개)

구분	기본	일반	수시	용역	계
사회보장	3	8	1	31	43
해외	6	6	1	30	43
가족	2	9	2	19	32
고령화	4	17	0	11	32
실태조사	0	7	0	22	29
청년	5	1	1	22	29
성과평가	1	1	1	25	28
저출산	0	18	1	9	28
보건의료	3	3	1	20	27
코로나19	4	2	1	16	23
사회서비스	7	2	0	13	22
법정계획	0	0	0	20	20
계	35	74	9	238	356

주: 저자 작성

다음으로 빈도가 10개 이상에서 20개 미만인 키워드를 살펴보면, 인구 구조 변화, 통계, 보건복지서비스, 생애주기, 양극화, 장애인, 지역사회, 인구, 지속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불평등, 소득보장, 정신 건강, 행정데이터 연계, 복지국가이다. 최근 들어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키워드는 통계, 생애주기, 인구, 지속가능성,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복지국가이다. 2021년도에는 인구구조 변화, 생애주기, 행정데이터 연계, 지역사회, 통계 등에 대한 키워드의 비중이 높았으며, 2023년도에는 통계, 생애주기, 지방자치단체, 인구, 지속가능성, 정신건강 등의 키워드 비중이 높았다.

〈표 4-1-7〉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의 키워드(10개 이상~20개 미만)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계
인구구조 변화	9	7	3	19
통계	6	3	9	18
보건복지서비스	2	9	6	17
생애주기	8	1	8	17
양극화	2	9	6	17
장애인	4	8	4	16
지역사회	7	3	6	16
인구	3	4	7	14
지속가능성	1	6	7	14
지방자치단체	0	5	8	13
기초생활보장	3	5	4	12
불평등	1	6	5	12
소득보장	5	1	5	11
정신건강	1	3	7	11
행정데이터 연계	8	1	1	10
복지국가	2	3	5	10
계	62	74	91	227

주: 저자 작성

빈도가 10개 이상에서 20개 미만인 키워드를 과제 구분별로 살펴보면, 기본과제에서는 양극화, 보건복지서비스, 생애주기, 지속가능성, 복지국가의 키워드 비중이 높았으며, 일반과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통계, 인구, 지방자치단체, 복지국가의 비중이 높았다. 용역과제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양극화, 지속가능성, 보건복지서비스, 생애주기, 통계, 행정데이터 연계의 비중이 높았다.

〈표 4-1-8〉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 구분별 키워드(10개 이상~20개 미만)

(단위: 개)

구분	기본	일반	수시	용역	계
인구구조 변화	1	10	1	7	19
통계	1	7	2	8	18
보건복지서비스	3	4	1	9	17
생애주기	3	4	1	9	17
양극화	4	2	1	10	17
장애인	2	0	0	14	16
지역사회	2	2	3	9	16
인구	0	5	0	9	14
지속가능성	3	0	1	10	14
지방자치단체	0	5	1	7	13
기초생활보장	0	0	0	12	12
불평등	2	3	1	6	12
소득보장	1	3	1	6	11
정신건강	2	3	0	6	11
행정데이터 연계	1	0	1	8	10
복지국가	3	5	0	2	10
계	28	53	14	132	227

주: 저자 작성

한편,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중에서 키워드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분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5개 이상에서 10개 미만인 키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디지털 전환, 사회보장 재정, 환경변화 대응, 미래사회 대응, 사회통합, 유연성 등이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키워드는 건강보험, 관리운영, 아동보호, 지역사회 돌봄, 노인, 의료보장, 평가체제이다. 2021년도에는 환경변화 대응, 미래사회 대응,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키워드 비중이 높았으며, 2023년도에는 건강보험, 사회보장 재정, 관리운영 등에 대한 키워드 비중이 높았다.

〈표 4-1-9〉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의 키워드(5개 이상~10개 미만)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계
건강보험	0	3	6	9
디지털 전환	1	5	3	9
사회보장 재정	2	1	6	9
환경변화 대응	8	0	1	9
미래사회 대응	7	0	1	8
사회통합	4	2	2	8
유연성	1	6	1	8
감염병 대응	3	1	3	7
관리운영	0	1	6	7
국가보훈	1	4	2	7
국민연금	2	3	2	7
기후 위기	2	2	3	7
노인돌봄	4	0	3	7
보건의료인력	6	0	1	7
사회보장제도	3	4	0	7
사회정책	2	4	1	7
소득분배	2	4	1	7
아동보호	1	1	5	7
지역사회 돌봄	2	2	3	7
노인	1	2	4	7
노인장기요양보험	3	2	1	6
노후소득보장	2	2	2	6
사각지대	4	1	1	6
식품	0	3	3	6
아동돌봄	2	1	3	6
의료보장	0	0	6	6
치매	2	3	1	6
포용국가	5	1	0	6
건강증진사업	0	4	1	5
국민건강보험	3	2	0	5
국제협력	3	1	1	5
사회보험	3	1	1	5
평가체계	0	2	3	5
계	79	68	77	224

주: 저자 작성

빈도가 5개 이상 10개 미만인 키워드를 과제 구분별로 살펴보면, 기본 과제에서는 디지털 전환, 미래사회 대응, 소득분배, 환경변화 대응, 기후 위기, 사회정책, 아동보호, 노인, 건강증진사업 등이 있으며, 일반과제에서는 유연성, 관리운영, 사회통합, 사회보장 재정, 사각지대 등이다. 용역 과제에서는 건강보험, 보건의료인력, 감염병 대응, 지역사회 돌봄, 식품, 의료보장, 사회보장 재정,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돌봄, 국민건강보험, 국제협력, 사회보험, 평가체계 등의 키워드가 분석되었다.

〈표 4-1-10〉 최근 3년간 수행된 과제 구분별 키워드(5개 이상~10개 미만)

(단위: 개)

구분	기본	일반	수시	용역	계
건강보험	1	0	0	8	9
디지털 전환	5	1	1	2	9
사회보장 재정	1	3	0	5	9
환경변화 대응	2	1	3	3	9
미래사회 대응	3	1	0	4	8
사회통합	0	4	0	4	8
유연성	0	5	0	3	8
감염병 대응	1	0	0	6	7
관리운영	1	5	0	1	7
국가보훈	0	0	1	6	7
국민연금	1	0	1	5	7
기후 위기	2	1	0	4	7
노인돌봄	1	2	1	3	7
보건의료인력	0	0	0	7	7
사회보장제도	1	1	0	5	7
사회정책	2	0	1	4	7
소득분배	3	0	0	4	7
아동보호	2	0	0	5	7
지역사회 돌봄	0	1	0	6	7
노인	2	1	0	4	7

구분	기본	일반	수시	응역	계
노인장기요양보험	0	1	0	5	6
노후소득보장	1	1	2	2	6
사각지대	0	2	1	3	6
식품	0	0	0	6	6
아동돌봄	1	0	0	5	6
의료보장	0	0	0	6	6
치매	1	1	0	4	6
포용국가	1	1	0	4	6
건강증진사업	2	0	0	3	5
국민건강보험	0	0	0	5	5
국제협력	0	0	0	5	5
사회보험	0	0	0	5	5
평가체계	0	0	0	5	5
계	79	79	79	79	79

주: 저자 작성

3. 사회정책 환경 변화 키워드 연구 동향

이번에는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 관련 키워드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는 인구·가족구조 변화, 소득분배와 경제전망, 디지털 기술 발전, 기후 변화, 건강격차와 건강 증진,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키워드이다. 그 밖에 빅데이터 분석에는 불평등, 양극화, 기후 위기,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적 재난이 키워드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인구·가족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인구추계모형,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 변수에 대한 연구, 국내 인구이동 변동 양상에 대한 연구, 이민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노후소득보장이나 아동수당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불평등 및 양극화와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한국 사회의 격차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과 연관시켜 살펴보기보다는 돌봄위기 가구, 보호대상 아동, 청년의 가족형성, 중년층 노동 불안정성과도 연결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건강격차와 건강증진과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평가에 대한 연구, 국가 의료비 데이터 구축에 대한 연구, 국가예방접종과 관련된 연구와 난임시술, 희귀질환, 과대 의료이용자들의 건강격차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보건의료 전달체제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의료보장 혁신과제 발굴, 필수의료지원 강화 및 건강보험 공공정책 수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미래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보험료 부과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기후 변화, 사회적 재난,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기후 변화 및 기후 위기와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기후 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 기후 위기와 정신건강, 미세먼지와 건강, 기후보건영향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적 재난 및 미래사회 대응과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미래 질병 위험, 포스트 코로나 비전 수립,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중장기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디지털 복지국가와 딜레마를 연결하여 살펴본 연구,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연구, 가짜뉴스 탐지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표 4-1-11〉 사회정책 환경 변화 키워드별 연구 동향

구분	주요 과제 리스트 (일부)
인구·가족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 인구추계모형 구축과 활용방안 -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 변수 영향 분석 - 국내 인구가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 -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과 과제 - 인구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불평등 및 양극화	- 한국 사회 격차 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 -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 돌봄위기 가구 내 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장 기간 내 자립지원 방안 연구 - 청년의 계층적 가족형성과 소득불평등 연구 - 청년의 금융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건강격차와 건강증진	- 2023년 국민보건계정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평가 연구 - 국가 의료비 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운영방안 연구 -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과대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 연구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 의료보장 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전략 모색 - 필수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공공정책 수가 도입방안 - 보건의료 미래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 국내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비교연구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보완 연구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의원급 중심으로
기후 변화 및 기후 위기	- 기후 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 개념적 접근과 사례를 중심으로 - 기후보건 영향평가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연구 -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기후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개선을 위한 최신 정책 동향 연구
사회적 재난 및 미래사회 대응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태 분석 연구 - 한국의 미래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 - 포스트 코로나, 비전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민의 건강 영향과 의료이용 변화 분석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강보험 중장기 추진 전략 모색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디지털 전환	-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연구: 정책 방향과 과제 -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 의료 비용효과성 분석 연구 - 기계학습 기반 보건복지 분야 가짜뉴스 탐지 방법 연구

주: 저자 작성

4. 현재 및 미래 키워드 연구 동향

마지막으로 2021~2023년 연구 동향에서 ‘현재 및 미래 이슈’ 키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조사한 (외부)전문가 패널 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전문가 조사 결과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부)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는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와 가족 분야에서 제시된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을 기준으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전문가 조사에서는 중기적으로 연구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변화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현재 이슈’로 도출된 키워드는 돌봄, 인구감소 및 인구이동, 불평등, 정신건강이었으며, ‘미래 이슈’에는 기후 변화 및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사회적 재난,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유연성 등이다.

먼저, 현재 이슈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의 연구 동향을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의 이슈에서는 노인돌봄, 아동돌봄, 지역사회 돌봄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노인돌봄에서는 노인돌봄 기금, 노인돌봄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와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 노인요양시설 수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미래 노인 정책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동돌봄에서는 보호대상 아동, 장애아동, 돌봄 위기가 구에서의 아동 돌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돌봄이나, 다주체 협력, 돌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 돌봄을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개선해 보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이 반영되어 마을 돌봄, 돌봄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정책과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에서는 돌봄 정책 거버넌스, 전달체계, 예산 지원 및 평가 체계까지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하

였다. 그 밖에 영 케어러에 대한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가족돌봄에 대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인구감소 및 인구이동의 이슈에는 인구구조 변화, 인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소멸, 지역 인구변동, 인구 양극화 진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인구정책에 있어 국가 간의 비교 연구, 정부 정책과 지자체 간의 정책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 연결지어 인구정책을 제안하고,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밖에 국내 인구이동 및 이민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량 제고, 인구교육,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아동수당정책, 복지재정, 보훈 대상자, 사회적 재난 대비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불평등 이슈에는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 지역불평등, 소득불평등, 건강불평등, 사망불평등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불평등은 빈곤과 격차, 계층, 성별, 임금 등과 연결되어 사회격차, 연금격차, 지역격차, 의료격차, 성별 임금격차와 연결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불평등에는 기후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에 대한 연구, 생애 관점에서의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연구, 청년의 계층적 가족형성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 농촌 청년, 가족형성에 사회불평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건강불평등에서는 지역불평등, 상병수당, 보건의료인력 격차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소멸과 함께 연결되어 지역불평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개선방안 및 대응 전략,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제 비교 및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정신건강 이슈에는 건강증진사업의 일부 파트로만 존재하였던 키워드가 지금은 자살이나 사회적 재난, 트라우마 등과 연결되어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정신건강은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와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생애주기적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정신건강은 기후 위기나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위기에 대응하는 예측 모델 등도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미래 이슈'로 도출된 키워드의 최근 3년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 변화 및 기후 위기 이슈에 대한 연구는 이미 현재 이슈에서 도출된 키워드에서 언급한 바 있다. 큰 틀에서 보건복지의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기후 위기를 한 축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서 기후 위기가 미치는 영향, 불평등과 사회보장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그 밖에 기후 변화 및 기후 위기는 기후 변화 등 미래 질병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보건정책 방안, 미래 사회 변동 중 기후 변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디지털 전환 이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연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의 건강영향평가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연구, 한국의 미래 질병 위험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재구조화 및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중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 변동 중 디지털 전환이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예측하는 연구가 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슈는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전달체계와 연결하여 연구가 수행

되기도 하였으며, AI를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탐지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 밖에 미래 이슈에는 지속가능성, 유연성, 거버넌스 등에 대한 키워드가 분석되었다. 지속가능성은 공공부조, 사회보장,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국제기구 및 다자기구 대응전략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거버넌스에는 복지 부문에서의 동네 거버넌스 체계 분석 및 정책과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유연성에는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일·가정 양립 지원 실태조사, 돌봄에서의 지역사회 돌봄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를 보면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제시한 주요 이슈 및 키워드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슈에 대한 환경분석 및 원인 진단은 면밀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받아들이고 적응을 위한 연구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미래 이슈로 도출된 키워드는 중기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연구이자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변화에 대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이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1-12〉 현재 및 미래 이슈 키워드별 최근 3년간 연구 동향

대분류	중분류	주요 과제 리스트 (일부)
현재 이슈	돌봄	-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 돌봄안전망 혁신·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 - 돌봄위기 가구 내 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 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 대안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정보 활용 방안
	인구감소 및 인구이동	-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 -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 지역 불평등과 인구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 연구 -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 인구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불평등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 기초 연구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 노년기 건강불평등과 노후건강보장 방안 - 가족 형성과 사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사망력 변천과 사망 불평등: 진단과 과제 - 보건복지의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주거 및 일상생활 분석 -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건강 및 보건의료 지표 분석
	정신건강	- 정신건강 분야 국제협력 기반 조성 및 대응방안 연구 - 정신건강 위기 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 연구 - 지역 기반 정신건강지원 제도평가 - 정신건강증진사업 특정 성별 영향평가 - 자살예방 전달체계 개편 연구

대분류	중분류	주요 과제 리스트 (일부)
미래 이슈	기후 변화 및 기후 위기	- 기후 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 개념적 접근과 사례를 중심으로 - 기후 변화 등 미래 질병 전략 수립 연구 -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기후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2023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 -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보건 정책 방안
	디지털 전환	-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I.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연구: 정책방향과 과제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전 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 기계학습 기반 보건복지 분야 가짜뉴스(fake news) 탐지 방법 연구 -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예측 연구: 영향 변수 도출과 시나리오 작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재난	-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정책과제 - 건강형평성 관점의 재난통계 개선 - 사회재난 영향평가 : 코로나19가 유럽과 한국의 고령층에 미친 영 향을 중심으로 - 포스트 코로나, 비전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민의 건강 영향과 의료이용 변화 분석
	지속가능성	- 연금·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2023년 다자기구 회의 감염병 분야 의제 대응 전략 연구 -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 복지 부문 읍면동 동네 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유연성	-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주: 저자 작성

제2절 사회정책 중장기 설정 방향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사회환경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에 수행한 연구과제 등에 대해 세세하게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장기 과제 설정에 있어 앞에서 분석한 주요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⁶⁾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연구로 준비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인력 등에 대한 대응 연구이다. 2023년부터 우리 사회의 핵심 논의 사항인 의료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충분히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과제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 현상 속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의료수요 증가, 노동시장과 일상생활 등에서 나타나는 질병, 질환 등에 대한 대응,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의료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현재 정부가 사회적 타협의 형식으로 중장기적인 의료인력 수요에 대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중기 과제로서는 동 과제 이외에 현황과 전문가 분석 등에서 제시된 좀 더 포괄적이고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이외에 보건의료 서비스 고도화(AI, 디지털 전환 등과 연계), 지역 의료격차,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등 크게는 중장기 대응으로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대응 방향과 이 속에서 단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 등이 제안될 필요가

6) 이하의 내용은 2023년 상반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현안 및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된 중장기 과제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있다. 전문가 및 연구기관 종사자 설문에서도 제기된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감염병 위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의 대응 방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분배 분야에서의 중기계획은 사회보장 재정과 관련된 빈곤예측모델 개발, 기후 위기·인구구조·노동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방향, 현 정부의 약자 복지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련 연구, 현대사회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고립·은둔층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연구, 기타로 사회보장 행정 DB, 건강보험공단 DB 등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득분배, 불평등, 양극화 및 격차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소해야 할 주요한 문제이고, 관련 정책과의 연계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소득분배는 단순히 소득불평등 혹은 빈곤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현상과 연결되며, 새로운 취약계층, 고립·은둔 같은 새로운 대상과 영역과도 연관된다. 이미 전문가 조사, 향후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취약층으로 소수자,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 전문가 조사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 지속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금개혁,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세대, 젠더, 지역, 정치 등) 등에 대한 원인과 대응책 등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연구가 기후 위기, 노동시장 변화 등과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등도 포함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정책과 연관되어 개선이 필요한 혹은 새롭게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전통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여성 등을 포함하는 것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형태의 취약계층과 더불어 사회서비

스 분야 일자리와 관련된 부문, 전달체계 등 매우 방대한 연구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미 중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과제 속에서도 사회서비스 인력과 지원에 대한 과제는 물론이고 서비스 대상별로 장애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개인예산제, 장애 개념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 아동·가족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형태 등장에 따른 대응,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 분야로는 노인 대상 돌봄제도, 노년 단계별 재구조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조사, 빅데이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주요한 이슈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등에서 나온 견해들과 함께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전달체계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대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부문 등은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델파이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국내 인력, 외국인 인력 등)와 서비스 대상층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5개년 계획, 유보통합-돌봄교실 확대 등이 어떻게 연동되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재정 및 DB 연구 분야와 관련한 중기계획으로는 재정추계모형 구축,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대응(재정, 행정 DB 등), 생애주기별 연금 대응,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평가 등이 제안되었다. 이번 내외부 환경변화, 전문가가 조사 등을 통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의 사회보장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통적인 취약계층부터 새로운 취약계층까지 사회정책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는 필연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추계 모형 구축 등은 주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지역소멸, 지방자치단체 재원 등 지역에서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연구로서 현재 정부와 사회정책 분야에서 주요한 이슈와 과제라고 판단하는 행정 DB 구축, 연계 및 평가 등에 대한 현안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고유사업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회변화에 따른 조세의 부담구조, 사회정책에서의 재원 배분(생애주기, 중앙 및 지방) 등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 사회복지 지출 구조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과제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분야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고 해결 방안 마련 또한 쉽지 않은 분야이다. 중장기 과제에도 이를 반영하듯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인구 및 저출산 DB 구축, 지역사회에의 영향, 가족 형태의 변화 양상과 대응, 교육-돌봄 연계 등 아동과 관련된 지원방안,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의 문제 등과 더불어 인구·저출산 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한 여러 포럼 등이 잘 갖추어져 중기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 델파이, 연구기관 연구자 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보면, 궁극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의 이행,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애주기 인구구성 변화와 산업 등의 영향, 여기에 가족구조(다문화 가족, 이민자, 1인 가구 등) 다양화, 외국인 인구 증가 등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 설정한 중기 과제 속에도 이를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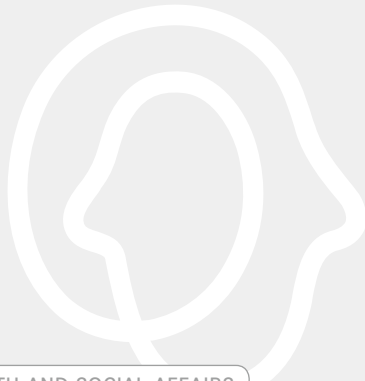
합하고 있지만, 이번 중기 연구의 결과는 다음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저출산의 원인부터 이로 인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정책 대응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단기에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야 할지,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 등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대응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구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교류, 그리고 현재와 향후에 지속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국제협력(ODA)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조사의 분야별 과제 발굴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타 분야로서 여러 차례 제안된 것이 국제협력과 관련된 연구과제이다. 중기 과제 제안에서도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된 연구 지원, 심포지엄 등은 물론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등에 대한 분석과 대응 모색, 국제협력 관련 DB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서 제안되었다. 제한적인 구조하에서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력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면, 현 정부의 현안이고 주요한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협력(ODA) 등에 대한 지원사업, 이번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된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대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 등이 주요한 사업으로 논의될 필요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중장기 사회정책 변화 방향

제2절 중기 정책 연구과제 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중장기 사회정책 변화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 동향, 전문가 설문, 연구 동향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정책 변화는 다양하게,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한 시대적 화두로서 언론, 전문가 등은 물론 국민도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 소득분배라는 현재적 위기 상황과 디지털 전환(기술혁신) 및 기후 위기라는 미래적 위기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심각한 저출산 구조 속에서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다양성 사회,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및 가족구조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규명과 현재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를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순응하며 생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고, 저성장 구조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한다. 취약 계층과 빈곤층을 위한 대안 마련은 물론이고, 중간계층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고비용 사회구조를 개편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 계층 사다리의 붕

과, 청장년기 독립생활, 결혼 후 가족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주거비 부담(모기지, 주택 마련 비용 등), 나이가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질환,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통·통신비 등 국민 개개인이 평생을 생활하며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구조를 점차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사회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하여 시대 변화,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델파이 등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및 가족구조 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했고, 이를 개선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원인 파악,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구 증가 등에 대한 대응 방안,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운영과 지속가능성, 지역의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격차의 문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인구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까지 논의와 담론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에 더해 경제·사회 전반에 갈등과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자녀 수 감소에 따라 소득계층별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의 차이와 이로 인한 계층이동, 사회이동성 저하 현상, 노동시장 출발 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소기업, 성장산업과 사양산업 등) 차이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 등은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우리 국민은 소득분배로 인한 양극화에 비해 자산 및 부동산 격차로 인한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미 학생 시기에 사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증여 등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그대로 연결되고 이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발생하는 고령화 현상은 노후소득에 취약한 한국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결국 현세대 노인 대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 설정이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세대에게 재원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세대에 대한 지원은 약화될 수 있다. 청년 및 중장년 세대는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런 지원을 통해 사회이동성이 높아지거나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여건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 규모와 양적인 측면에서는 청년정책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이 계층이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 산업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 현상은 노동자 간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좀 더 좋은 일자리(예, 의사, 법조인, 좋은 기업으로 입사 등)를 얻기 위한 경쟁의 심화는 교육에서의 계층 간 갈등과 불평등을 높이고 있다.

경제사회적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배제된 계층은 위기 발생 시 언제든지 사회병리 현상을 만들어내고, 개인과 가족 모두를 위기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사회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도록 만든다.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직하거나, 창업 이후 실패 등으로 생계위협을 느낄 때 본인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두 번째 기회(second chance)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직면한 경제사회적 현상에 대한 치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한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로 인한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 또한 함께 발생하고 있다. 두 현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노동, 주거, 소득, 환경 등 국민의 삶에 직접 연관되고 있으며, 미래 우리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에 사용한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라는 표현보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최근 사용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국민이

직면하게 되는 위기 국면이 하나의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나면서, 특정한 사회보장제도 하나만으로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정책에 속하는 교육-노동-복지-안전 등 각각의 영역이 함께 연계되어 위기 국면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중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사회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더불어 각각의 영역에서 여전히 부족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함께 고민되고 연구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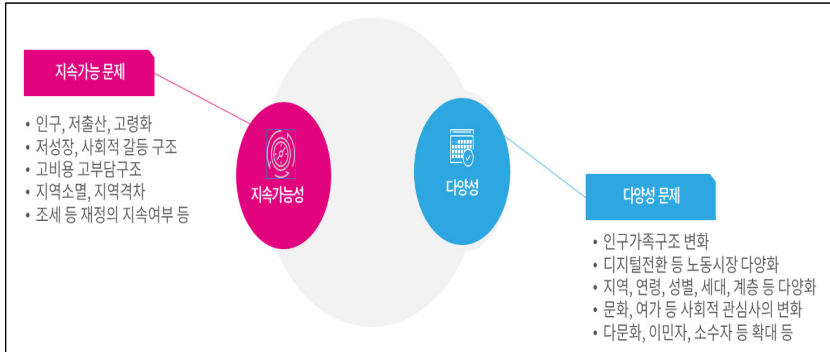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정책연구과제 방향

지금까지 분석한 것처럼 한국 사회는 다이내믹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상황 변화가 계속 발생하고, 정치적 변화가 국민 삶은 물론 미래 사회정책에 주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는 점에서 사회의 다이내믹함과 정치 상황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사회정책 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 및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된 주요 키워드를 제안하면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의 두 가지 단어로 대변된다.

첫째, 제2~3장까지의 사회변화 분석,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보면,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다이내믹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개인 및 가구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2-1] 주요 키워드: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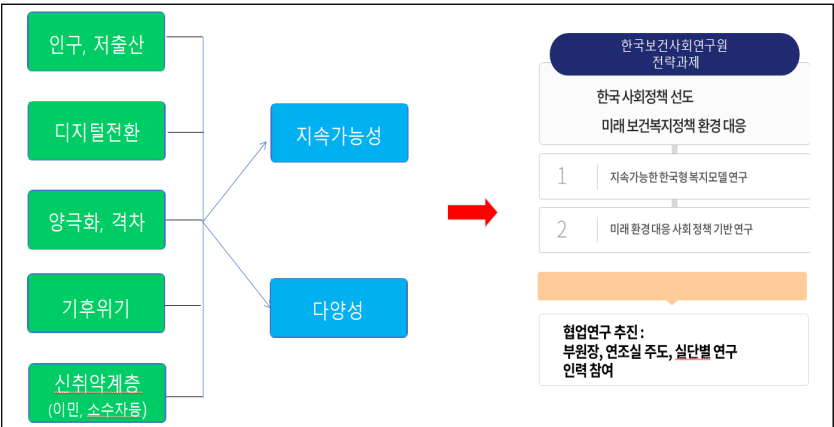


두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대응이다.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소득 격차의 증가, 디지털 전환 등의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사회정책의 대상이었던 노인, 장애인 등을 넘어서 새로운 취약계층, 위기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정책의 기반과 틀 속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위기계층과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소 늦게 대응하고, 일시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정책 및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을 진단하고 설정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 차원에서 현재와 미래 상황을 직시하고 다이내믹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업과제가 필요하다. 출연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과제 설정을 통해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및 인구 분야 등에서 사회정책이 직면한 위기와 현재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단기 및 중기적 측면에서 한국의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 제2절에서 본 것과 같이 개별 영역과 분야별 연구에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문제 파악과 대응 방향을 적

절하게 설명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제안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 복지국가, 한국 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서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역별로 서로 다른 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협업과제가 제안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진정 복지국가인가, 성장과 복지는 선순환이 가능한가, 산업 및 노동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사회변화,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변화와 격차 현상을 복지국가가 해결할 수 있을까, 최근에 등장하는 디지털 복지국가가 무엇인가 등의 주제에 대한 분명한 사고와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와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사회정책이 준비해야 할 정책과 방향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 연구가 필요한 점은 정치적 변화가 지속되는 속에서 차칫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사회정책이 제안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정책 영역의 정합성 문제, 지속가능성 문제, 사회적 갈등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하고 정확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제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5-2-2] 향후 전략과제



보건의료, 소득분배, 사회서비스, 인구, 재정·통계(DB) 등의 영역에서도 현재와 같이 현행 제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도 의미 있고 필요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회정책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크게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분야별로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거버넌스, 전달체계 등을 진단하고 향후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및 인구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논할 수 있는 과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가중 속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미 경험한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방향,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수도권이 강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등에 대한 과제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장 분야는 전통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두 가지 틀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인구 및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노동환경의 진화 속에서 자격 중심,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체계는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면서 공공부조형 소득보장제도가 강화(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되거나 새롭게 현금성 급여 등이 등장(기본소득, 안심소득, 기회소득, 각종 수당 등)하고 있다. 공공부조형 사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새로운 소득보장체계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전환 속에서 다양화되는 노동시장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소

득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새로운 취약계층 등장,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 등과 겹치면서 사회서비스라는 표현보다는 돌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와 돌봄이라는 어휘가 가지는 차이와 유사성 등의 특성을 명확히 하면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복잡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거버넌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전체 협업과제 속에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간 연계 등에 대한 협업과제 발굴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연구 역시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핵심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밀 진단과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전문가 델파이 등 여러 조사 및 분석에서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원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저출산 및 인구와 관련된 과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하나의 기관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과 교수·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과제를 통해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과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과 극복방안 등에 대해 공론의 장을 통해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가 필연적이라면 변화에 적응하여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회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과제도 필요하다.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이제는 적응의 단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 조사에서 제시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재정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5-2-3] 분야별 전략과제

	지속가능성	다양성
보건의료 분야 	-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제도운영, 재정 등) - 새로운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대응방향 -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격차 등	-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대응 방안 - 보건의료 서비스 다양화, 다극화 병행(인력, 전달체계 등) - 씨, 디지털 기술 발전과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전략
소득보장 분야 	- 소득보장 재정안정화 방안: 연금, 공공부조 등 - 새로운 소득보장체계 대안 연구: 자격중심 사회보험 넘어 - 공공부조성 급여 확대와 소득보장제도 재정 부담 관련 연구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자 대상 소득보장 체계 - 영국화, 격차 극복을 위한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 빈곤, 불평등, 양극화, 격차 등 기반 연구
사회서비스 분야 	-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 현물급여(서비스, 비우체 등) 확대와 사회장애허리 연계 - 인구,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수요예측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방안 - 서비스 대상별(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 정신건강 등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인구가족 분야 	-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원인진단과 적용방안 연구 - 인구구조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	- 가족구조 변화(1인 가구, 다문화 등)와 사회정책 방향 -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와 대응 방향 - 새로운 취약계층(성소수자, 이민,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정책지원 방안
재정 및 기타 분야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 사회정책과 조세제도 간 역할과 연계 - 빅데이터, 행정DB 등의 사회정책 연계 혹은 활용 방안	-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 방향 -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사회정책 자원분담에 대한 연구 - 사회정책 통계 개발 및 확충 방안 - 각종 재난과 사회정책 간 연계

재정 및 DB 분야는 현재 가장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속에서 현재의 재원 구조(조세, 사회보험료 등)로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대응 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행정 DB 등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개인정보로 인한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 거버

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과제 또한 필요하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현안 과제가 함께 제시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 설문 등에서 제시된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현안 대응,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 인력(‘다양한 의료인력 확충, 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간 격차 문제 등)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공공과 민간의료 간 조응 등)에 대한 대응 과제가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AI 등 정보통신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와 접목 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과제가 제안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생애주기, 계층별로 구분되는 소득보장체계 속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연금, 공공부조 등) 속에서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가 다양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위해 어떻게 변화해 가는 것이 국민 편의 증진과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한 화두로 대두된 바가 있으며, 가장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라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의 사각지대(노인, 장애인, 아동 이외에 새로운 취약계층 등), 서비스 대상별로 필요한 정책,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 영역에서 중첩되는 분야가 정신건강 분야이다.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보건의료 분야이지만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서비스 영역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가 함께 협업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저출산 및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은 크고 작다는 표현 이전에 무엇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에 기반하여 1인 가구, 다문

화, 소수자 등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정책 영역에서 배제·소외되지 않고, 사회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인구 및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배제 없는 지원 방안에 대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민자, 소수자 등 사회적 배제 계층의 증가가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연구과제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고령화 분야에서도 협업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들 수 있다. 빈곤이라는 점에서 소득보장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빈곤노인과 관련해 건강, 주거, 의료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분야 등도 함께 참여하는 협업연구가 필요하다.

재정과 DB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정책이 인구구조로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정책 재원에 대한 분담구조, 지방정부의 다양한 사회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데이터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계, 활용 등과 관련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 발전과 더불어 빅데이터 등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사회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연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제안을 위한 과제 또한 필요할 것이다.

기타 연구과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양극화되면서 발생하는 갈등 현상에 대한 해소 방안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젠더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 각종 폭력 등을 수반한 갈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조정할 정치권 역시 양극화되어 동일한 갈등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

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다문화 가족 등이 증가할 경우 사회갈등은 더 복잡하고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갈등 구조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급속한 기후 변화 속에서 각종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책적으로는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지만 기후 변화가 더 확산되어 재난의 일상화가 생길 경우 사회정책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여러 사회정책 과제를 제안해 보았다. 여기서 제안된 것들은 아래에서 보듯이 유사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과제 규모에 따라 한 번에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사 연구의 경우 기존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과 정책 당국자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연구와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부 연구는 하나의 분야로는 연구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에서 각 정책 영역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과제 발굴 또한 필요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과제가 발굴되고 제안되어 성과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제안된 과제들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표 5-2-1〉 분야별 전략과제 중, 최근 3년 간 주요 수행 과제 리스트

구분	지속가능성	다양성
보건의료 분야	- 국내외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 비교연구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의원급을 중심으로 -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연구 - 감염병 대응 국제협력 현황 및 협력체계 연구 - 2023년 다자기구 회의 감염병 분야 의제 대응 전략 연구 - 보건의료 미래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 보건의료 분야 D.N.A 중장기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 - 2023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현황 평가 및 체감도 조사 - 지역기반 정신건강지원 제도평가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 보건의료인력 정보 통합 방안 연구 -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연구: 정책 방향과 과제 -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 의료 비용효과성 분석 연구 - 비대면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노인 대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의 건강영향평가 및 효과적 운영방안
소득보장 분야	- 기초연금 재정 열악 지자체 추가지원금 효과분석 및 국고보조 기준 개선방안 연구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 연금·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별정우체국연금 재정추계 검증 및 제도개선 연구 - 소득보장제도 종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 중장기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정책 연구 -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 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구분	지속가능성	다양성
사회서비스 분야	- 사회서비스 의제 발굴 및 정책 전략의 재구조화 연구 - 사회서비스 단가기준 마련 및 재정 운용 거버넌스 재구조화 연구 - 2023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 조사 -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예측 모델 기초연구 -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	- 미래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연구 - 농산어촌 지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 실천방안 모색-노인돌봄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 장애인 가족 지원방안 연구: 대안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 비대면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노인 대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의 진단과 과제: 지역 주도의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의 건강영향평가 및 효과적 운영방안 -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인구가족 분야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인구정책 방안 연구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 -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 인구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 - 정부 정책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도 분석 연구 -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 인구변동과 지속가능한 발전: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	-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 방안 연구 -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정부 정책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도 분석 연구 -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연구-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 가족돌봄청년 정책 수요 분석 및 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구분	지속가능성	다양성
재정 및 기타 분야	- 생계급여 재정추계 연구 - 사회서비스 단가기준 마련 및 재정 운용 거버넌스 재구조화 연구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 복지재정 진단과 정책현안 연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체계 구축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DB 구축방안 -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사회보장 현황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의 사회적 정책적 활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공정성과 갈등 인식 - 사회통합 세부 지표 생산 및 분석 연구 -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역할 분담에 관한 기초연구 -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및 심층 분석 연구 - 아동 중심 통계 및 기반 구축 방안 - 보건복지 통계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확대방안 연구 -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정책과제 - 건강형평성 관점의 재난통계 개선 방안 - 사회재난 영향평가 : 코로나19가 유럽과 한국의 고령층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평가 연구

주: 저자 작성



-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9).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서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 강희정. (2024). 2024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월호. pp.9-2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10.4.).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제2부). 보도자료.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0837944>에서 2024.1.31. 인출.
- 국민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Health Plan> 5차 계획 (Health Plan2030)> 5차 계획(Health Plan2030). <https://www.khepi.or.kr/board?menuId=MENU01287&siteId=nul1->에서 2024.2.13. 인출.
- 국민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건강수명> 건강수명통계> 건강수명격차. <https://www.khepi.or.kr/hpn/healthLife/healthLifeDiff.do?menuId=MENU01313>에서 2024.2.13. 인출.
-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 관계부처합동. (2023).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 기상청. (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대전: 기상청.
- 김수영. (2016). 사회복지정보화의 윤리적 쟁점-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1), 193-224.
- 김성욱. (2022). 디지털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에 대한 복지국가의 해석과 대응.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pp. 231-274).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소영, 정순돌. (2019).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성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3), 179-214.

보건복지부. (2019).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보건복지부. (2023a). 주요업무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3b). 2023~2027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보건복지부. (2023.3.21.).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558324>에서 2024.1.31. 인출.

보건복지부. (2023.4.14.).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62783>에서 2024.1.31. 인출.

보건복지부. (2023.12.12a).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765>에서 2024.1.31. 인출.

보건복지부. (2023.12.12b).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764>에서 2024.1.31. 인출.

보건복지부(2024.2.2.)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2024-2028.

성준호. (2016).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한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 각국의 개인식별번호제도 및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공공사회연구, 6(2), 208-246.

여영준, 김유빈. (2023).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 :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Future Brief 23-17호(2023.10.23.)

임완섭, 황남희, 황주희, 신영규, 이지은, 이주미. (발간예정). 기후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 개념적 접근과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 (내부문건)

전진아, 윤강재, 고든솔, 박나영, 최소영, 백상숙, 이사야, 오유미. (2022). 심리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의진, 임현, 박노언, 박창현, 지수영. (2021).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슈페이퍼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주병기. (2023). 외환위기 이후 사회발전과 격차현상.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p.44-68).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통계청. (2022a). 인구동향조사,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2024.01. 15.
- 통계청. (2022b).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 통계청. (2023.12.14.).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보도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하재규. (2023.5.4.).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한의신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199에서 2024.1.31. 인출.
- 한국은행. (2023.11.30.). 경제전망(2023.11월).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소셜데이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repository.kihasa.re.kr/>)
- Alston, P. (2019). Digital Welfare Stat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https://undocs.org/A/74/493>에서 2023.10.9. 인출.
- Arntz, M., Gregory, T. and Zierahn, U. (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89, 1-34.
<https://doi.org/10.1787/5jlz9h56dvq7-en>.에서 2024.1.15. 인출.
- Belova, A., Gould, C. A., Munson, K., Howell, M., Trevisan, C., Obradovich, N., & Martinich, J. (2022). Projecting the Suicide Burden of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GeoHealth*, 6(5),

- e2021GH000580. <https://doi.org/10.1029/2021GH000580>.
- Burke, M., González, F., Baylis, P., Heft-Neal, S., Baysan, C., Basu, S., & Hsiang, S. (2018). Higher temperatures increase suicide r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Nature climate change*, 8(8), 723-729.
- Center for Climate Justice. (n.d.) What is Climate Justice? <https://centerclimatejustice.universityofcalifornia.edu/what-is-climate-justice/>에서 2024.1.15. 인출.
- Frey, C. B. and Osborne, M. A.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Oxford Martin Programme on Technology and Employment working paper*, 1-77.
- Harlan, S. L., Pellow, D. N., Roberts, J. T., Bell, S. E., Holt, W. G., and Nagel, J. (2015). Climate justice and inequality. *Climate change and society: Sociological perspectives*, 127-163. 송아영. (2022). 기후위기와 주거정책: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주거정책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 (pp.33-6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SSA. (2023). Social security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https://www.issa.int/analysis/social-security-response-climate-change-and-environmental-degradation>에서 2024.1.15. 인출.
- KBS 뉴스, 2023.10.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5908>에서 2024.1.15. 인출.
- KBS, 한국리서치. (2021). KBS-한국리서치 기후변화 인식조사 결과표.
- KOTRA. (2021).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비대면 산업 동향 및 진출전략: 디지털 헬스.
- NRC데이터정보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s://www.nrcdata.re.kr/nrc/usr/main.do>(2024.1.31. 접속)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23). Provisional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3. Geneva: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부록 1] (외부)전문가 패널 조사표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 도출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 사회,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 및 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 연구과제 도출 연구(연구책임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의 일환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원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고 이를 향후 정책연구과제의 방향성, 내용에 활용하고, 사회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원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그 의의를 가집니다.

응답은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조사 참여에 따른 위험 또는 손실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소속기관, 전공, 연락처 등)는 응답에 대한 사례(5만원 상당의 상품권)를 지급하는 용도 이외, 수집하거나 분석에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응답하기 어려운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본 조사는 2차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조사는 주요 안건 및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주요 과제에 대해 중요성, 타당성 등을 척도형으로 응답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차 조사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께서는 2차 조사까지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23.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문의)
한국능력협력컨설팅 02-3279-23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4-287-8217

1.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 사건

1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향후 5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
	행 추가 행 삭제
1	
2	
3	
4	
5	
6	
7	
8	

2. 정책환경 변화, 사회 문제 중에서 사회정책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

1 **보건 및 의료** : 의료체계, 공공보건, 지역사회보건, 건강증진, 예방, 의료보장 등을 포함한 영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또는 연구 주제와 그 이유

번호	정책 대응 과제/연구 주제와 이유
	행 추가 행 삭제
1	
2	
3	
4	
5	

2. 정책환경 변화, 사회 문제 중에서 사회정책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

2 **소득 보장 영역** : 빈곤, 격차, 소득(재)분배 등을 포함한 영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또는 연구 주제와 그 이유

번호	정책 대응 과제/연구 주제와 이유
	행 추가 행 삭제
1	
2	
3	
4	
5	

2. 정책환경 변화, 사회 문제 중에서 사회정책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

3 사회서비스 : 보육, 성인돌봄, 인적서비스 등을 포함한 영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또는 연구 주제 그 이유

번호	정책 대응 과제/연구 주제와 이유
	행 추가 행 삭제
1	
2	
3	
4	
5	

4 고용 및 노동 : 일자리, 고용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을 포함한 영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또는 연구 주제와 그 이유

번호	정책 대응 과제/연구 주제와 이유
	행 추가 행 삭제
1	
2	
3	
4	
5	

5 인구, 가구(족) : 인구 및 인구 구조 변동, 출생(산), 사망, 이동, 가구 구조 변화 등을 포함한 영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또는 연구 주제와 그 이유

번호	정책 대응 과제/연구 주제와 이유
	행 추가 행 삭제
1	
2	
3	
4	
5	

2. 정책환경 변화, 사회 문제 중에서 사회정책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

6 기타 : 1~5번 영역을 제외한 사회정책 영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또는 연구 주제와 그 이유

번호	정책 대응 과제/연구 주제와 이유
	행 추가 행 삭제
1	
2	
3	
4	
5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DQ1 귀하의 소속기관은 어디입니까?

- ☐ 학교/연구기관
- ☐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 ☐ 언론
- ☐ 기타()

DQ2 귀하의 업무분야는 무엇입니까?

- ☐ 보건의료분야
- ☐ 사회과학분야
- ☐ 기타()

[부록 2] (외부) 전문가 패널 조사표(2차)

제2차 전문가 조사 설문지

1차 조사에 응답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차 조사의 응답 문항은 1차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언급한 빈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정책을 통한 대응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2차 조사의 질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질문은 제시된 항목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 정도**입니다. 필요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항목이 **정책적 대응을 위하여 정책연구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문에서 제시한 항목에 대한 정책연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9점**', 반대로 '필요하지 않으며 매우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 **1점**'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점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제시된 항목에 대한 정책연구의 **시급성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미래 변화 대응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신설 또는 기존 정책 개혁을 모색하고자 할 때 해당 항목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해당 항목의 정책연구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즉시(2024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난 2026년부터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1점**'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점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3. 마지막 질문은 해당 항목의 정책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정도**입니다. 해당 항목의 정책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학계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1점**'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점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정책연구와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응답해주신 모든 분들께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사 참여와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2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 도출 연구

[필요성, 시급성]

작성요령
- 제시한 항목의 정책연구 필요성과 시급성 정도를 판단하시어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성: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9점', 반대로 '필요하지 않으며 매우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 1점' ※ 시급성: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즉시(2024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난 2026년부터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1점'

1 보건의료

항목	<질문 1> 정책연구의 필요성	<질문 2> 정책연구의 시급성
	1점 ~ 9점	1점 ~ 9점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보건의료체계		
신종 질환 및 감염병, 팬데믹 위기 대응력 강화		
약물(마약) 및 중독자 관리		
다양한 인구 집단별 정신건강 문제		
높은 수준의 자살(사망)률 대응		
건강보장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통합·일원화		
의료비 증가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실손보험 등)의 관계, 역할 재정립		
디지털 기술 활용과 보건의료정책		
공공의료 역할과 기능 정립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방안		
의약품 공급 불안정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공백) 문제		

[필요성, 시급성]

작성요령
- 제시한 항목의 정책연구 필요성과 시급성 정도를 판단하여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성: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9점', 반대로 '필요하지 않으며 매우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 1점' ※ 시급성: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즉시(2024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난 2026년부터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1점'

2 소득보장

항목	<질문 1> 정책연구의 필요성	<질문 2> 정책연구의 시급성
	1점 ~ 9점	1점 ~ 9점
생애주기별, 성별, 가구형태별, 경제활동 유형별 빈곤·불평등·격차에 대한 분석과 대응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인 빈곤 문제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자산 불평등		
빈곤·불평등 격차의 세대간 전승/전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기본소득, 최저소득,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등) 도입과 시행		
대규모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시적 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기술발전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 증가에 따른 소득보장체계 재편		
연금제도 개혁		
현금 급여, 사회수당 확대에 따른 공공부조 개편 방안		

164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 도출 연구

작성요령
- 제시한 항목의 정책연구 필요성과 시급성 정도를 판단하시어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성: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9점', 반대로 '필요하지 않으며 매우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 1점' ※ 시급성: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즉시(2024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난 2026년부터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1점'

3 사회서비스

항목	<질문 1> 정책연구의 필요성	<질문 2> 정책연구의 시급성
	1점 ~ 9점	1점 ~ 9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재구조화: 컨트롤 타워, 중앙-지방, 기능 조정 등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 예측		
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방안		
육구 기반 개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방안 및 공적 제공기관 확충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전문성 제고		
돌봄서비스 외국인 제공인력 증가에 대한 검토·분석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관리 방안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인구 감소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AI 기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 활용 방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유보통합) 방안		

[필요성, 시급성]

작성요령
- 제시한 항목의 정책연구 필요성과 시급성 정도를 판단하여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성: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9점', 반대로 '필요하지 않으며 매우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 1점' ※ 시급성: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즉시(2024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난 2026년부터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1점'

4 인구가족

항목	<질문 1> 정책연구의 필요성	<질문 2> 정책연구의 시급성
	1점 ~ 9점	1점 ~ 9점
미래 가구 구성 변화(1인가구, 다양한 형태 가구 등) 예측		
1인가구 증가와 사회보장정책 대응		
가족 형태의 다양성 증가와 정책적 대응 방안		
인구 감소 시대와 사회보장재정		
저출생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응 전략		
출산 가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		
육아휴직 일반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국제 인구이동 : 외국인 유입 증가 현황과 영향 분석		
다문화, 이주배경 가족 지원과 사회통합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생애주기별 인구 이동의 원인과 추세		

작성요령
- 제시한 항목의 정책연구 필요성과 시급성 정도를 판단하시어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성: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9점', 반대로 '필요하지 않으며 매우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 1점' ※ 시급성: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즉시(2024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난 2026년부터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1점'

5 기타

항목	<질문 1> 정책연구의 필요성	<질문 2> 정책연구의 시급성
	1점 ~ 9점	1점 ~ 9점
대규모 재난 대응과 사회보장정책		
조세지출제도와 재분배		
기후변화 및 대응 정책이 빈곤·불평등, 재분배,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갈등(세대, 계층, 젠더 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지역별 보건복지 수요 분석과 공급 전망		

[타당성]

작성요령
- 제시한 항목의 정책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의 타당성 정도를 판단하여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학계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1점'

1 보건의료

항목	<질문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의 타당성
	1점 ~ 9점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보건의료체계	
신종 질환 및 감염병, 팬데믹 위기 대응력 강화	
약물(마약) 및 중독자 관리	
다양한 인구 집단별 정신건강 문제	
높은 수준의 자살(사망)률 대응	
건강보장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통합·일원화	
의료비 증가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실손보험 등)의 관계, 역할 재정립	
디지털 기술 활용과 보건의료정책	
공공의료 역할과 기능 정립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방안	
의약품 공급 불안정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공백) 문제	

168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 도출 연구

[타당성]

작성요령
- 제시한 항목의 정책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의 타당성 정도를 판단하시어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학계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1점'

2 소득보장

항목	<질문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의 타당성 1점 ~ 9점
생애주기별, 성별, 가구형태별, 경제활동 유형별 빈곤·불평등·격차에 대한 분석과 대응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인 빈곤 문제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자산 불평등	
빈곤·불평등·격차의 세대간 전승/전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기본소득, 최저소득,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등) 도입과 시행	
대규모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시적 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기술발전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 증가에 따른 소득보장체계 재편	
연금제도 개혁	
현금 급여, 사회수당 확대에 따른 공공부조 개편 방안	

[타당성]

작성요령
- 제시한 항목의 정책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의 타당성 정도를 판단하시어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학계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1점'

3 사회서비스

항목	<질문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의 타당성
	1점 ~ 9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재구조화: 컨트롤 타워, 중앙-지방, 기능 조정 등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 예측	
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방안	
육구 기반 개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방안 및 공적 제공기관 확충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전문성 제고	
돌봄서비스 외국인 제공인력 증가에 대한 검토·분석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관리 방안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인구 감소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AI 기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 활용 방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유보통합) 방안	

170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 도출 연구

[타당성]

작성요령
- 제시한 항목의 정책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의 타당성 정도를 판단하시어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학계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1점'

4 인구가족

항목	<질문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의 타당성
	1점 ~ 9점
미래 가구 구성 변화(1인가구, 다양한 형태 가구 등) 예측	
1인가구 증가와 사회보장정책 대응	
가족 형태의 다양성 증가와 정책적 대응 방안	
인구 감소 시대와 사회보장재정	
저출생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응 전략	
출산 가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	
육아휴직 일반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국제 인구이동 : 외국인 유입 증가 현황과 영향 분석	
다문화, 이주배경 가족 지원과 사회통합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생애주기별 인구 이동의 원인과 추세	

[타당성]

작성요령
- 제시한 항목의 정책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의 타당성 정도를 판단하시어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9점', 반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학계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1점'

5 기타

항목	<질문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의 타당성 1점 ~ 9점
대규모 재난 대응과 사회보장정책	
조세지출제도와 재분배	
기후변화 및 대응 정책이 빈곤·불평등, 재분배,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갈등(세대, 계층, 젠더 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지역별 보건복지 수요 분석과 공급 전망	

172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 도출 연구

추가질문 앞에서 제시한 항목 또는 추가 항목을 포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연구가 무엇인지 선정하고(최소 1개 이상 최대 3개), 해당 정책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정책연구 제안
1	
2	
3	